

2026
08

since 1990 | vol. 429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nara.k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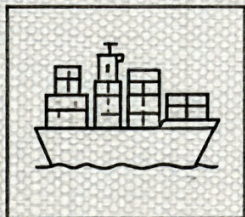
나라경제

Special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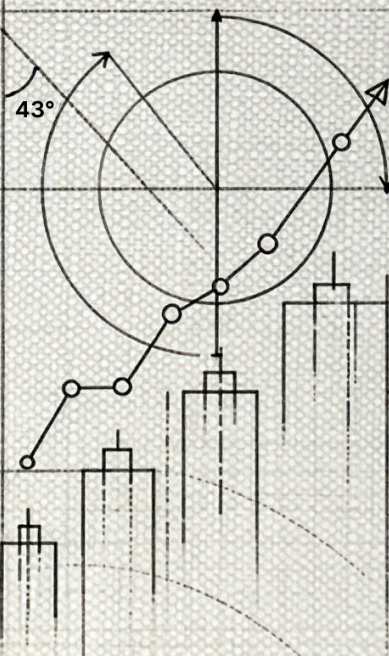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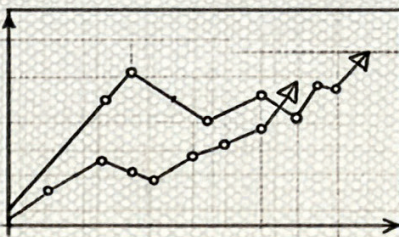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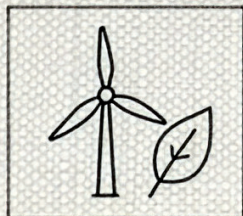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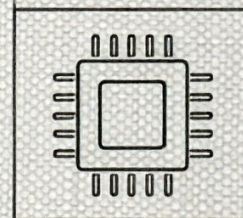
Issue

여기는 부산항,
배 들어옵니다



Now

AI와 미래②
진화한 불평등,
AI 격차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1 재정경제부 —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적립해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자 신설하는 국가 재정기금이다. 해마다 쓰고 끝나는 일반 예산과 달리 청년, 인재, 지방, 첨단산업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AI 반도체 풀패키지

국산 AI 기술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반도체부터 파운데이션 모델,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플랫폼, AI서비스까지 하나로 연결한 종합 지원 체계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센터에서 AI를 실제로 구동하는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한다.

3 행정안전부 — 지방우대지수

서울에서 멀수록, 인구감소 위험이 클수록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 지표.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험,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등을 종합해 산정하며, 각 부처의 재정사업과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에 지표를 개발하고 2027년 예산 편성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4 산업통상부 —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1,500조 원 이상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생산시설과 전력·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한다. 미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AI 경쟁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5 국토교통부 — 5극 3특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권으로 묶어 산업과 생활권을 함께 키우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시도별로 개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 단위로 산업, 교통,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재정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경제권을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6 해양수산부 —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비수도권 해양·수산 기업과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는 정책 펀드로, 펀드의 70% 이상을 지방 해양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올해 215억 원 규모로 시작해 2030년까지 1,4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해 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7 중소벤처기업부 — 모두의 창업

나이와 경력에 관계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창업 프로젝트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멘토링, 시제품 제작, 사업화 자금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올 상반기 1기에는 6만3천여 명이 지원해 5천 명을 선발했다. 하반기에는 지원 규모를 약 1만 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예비 창업가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망

재정경제부

중동전쟁 이후 대비하며
잠재성장률 반등 꾀할 것 **10**

김귀범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산 칩부터 인프라, 서비스까지
K-AI 반도체 풀패키지
생태계 구축한다 **12**

조경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 개발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 **14**

채경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산업통상부

3대 메가프로젝트
초고속 이행 위해 총력 지원한다 **16**

박태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

국토교통부

5국 3특 중심으로
국토공간 개혁하고
3기 신도시 추진 가속화 **18**

소성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해 **20**

조선·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임창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2기 본격 전개해
혁신 창업가 1만 명 발굴 **22**

진수웅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담당관

여기는 부산항, 배 들어옵니다

도입

입지, 환적 허브, **26**
북극항로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부산항

박성제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 기자

역사

부산과 부산항이 없었다면 **27**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전성현 동아대 사학과 교수

인포그래픽

365일 24시간 쉬지 않는 항구... **28**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
환적 세계 2위

『나라경제』 편집실

현장

부두에 사람이 없다... **30**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부산 신항

정서현 『나라경제』 기자

과제

다음 도전은 탄소중립... **32**
2050년 ‘넷제로’
달성 위한 3가지 과제

김보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북극항로

수에즈 항로가 키운 싱가포르항, **33**
북극항로가 키울 부산항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선장



AI와 미래 ②

진화한 불평등, AI 격차

도입

미국에선 반AI 세력 결집 중... **39**
AI가 불러온 양극화의 비극

최지원 동아일보 산업1부 기자

인포그래픽

응답자 79%, **40**
“AI 활용 능력이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것”

『나라경제』 편집실

장애인

장애인의 AI 격차가 **42**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조금
늦게 배우는 문제’가 아닌 이유

김경식 칼럼니스트

제언

AI 양극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44**
줄어들지 않는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경제정책해설

공장으로 들어간 AI... 46 2030년까지 제조업 대전환한다

권순목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48 연 3조6천억 원 투입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50 30억 상한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

세계는 지금

EU 52 EU, 전기화 추진으로 기후 리더십 이어갈까?

신인규 주벨기에EU대사관 겸
주NATO대표부 환경관



ASIA 55 파운드리 대만, 메모리 추격자 중국, 그 사이의 한국

박준석 주홍콩총영사관 책임연구원

칼럼

K인사이트 34 우리는 선진국민일까?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임정욱이 만난 혁신기업가 36

김주영 하이퍼엑셀 대표
“더 많은 사람이 더 싸게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칩을 만들 겁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전문가 기고 58

AI 모델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잘 쓰는 나라’가 AI 강국

박승훈 오마주 AI 대표,
재정경제부 인공지능자문관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60

사막에 부는 K뷰티 바람

정동욱 KOTRA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 차장

AI 트렌드 따라잡기 62

4,755조 원의 베팅...
한국은 왜 하드웨어에
국운을 걸었나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강양구의 과학 토크 64

2천만 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면...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쓸모없음의 쓸모 66

목적 없는 대화를 한다는 것

김중혁 소설가

오늘도 똑똑한 금융생활 67

절세가 곧 재테크다

이현 중앙일보 기자

로드리고의 여행 한 페이지 68

오늘도 세상의 알몸 속으로
뛰어들어 볼까

박 로드리고 세희 촬영감독



밥 한 그릇의 위로 72

냉면, 차갑고 뜨거운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

시평 74

10번의 공(功)과
한 번의 과(過)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발행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 발행인
김세직 KDI 원장
- 편집인
김후진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
송인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 편집주간
이용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실장
-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김의택 혁신정책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옥 기획재정담당관
외교부 서영민 다자경제기구과장
행정안전부 김수경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연경 기획혁신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조혜윤 홍보담당관
산업통상부 주원석 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박영식 기획조정담당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염정섭 녹색전환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최영범 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소성환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임창현 기획재정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진수웅 기획총괄담당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정섭 혁신기획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임경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양병권 정책홍보팀장
- 편집간사
김선정 재정경제부 혁신정책담당관실 연구원

- 편집장
양은주
- 취재·편집기자
오성록, 이강선, 황현성, 정서현
- 감수
이재열
- 발행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ISSN
1227-8033 08
- 홈페이지
<https://nara.kdi.re.kr>
- e-mail
nara@kdi.re.kr
- 발행일
2026년 7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37권 8호(통권 429호)
-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 기사문의
044-550-4646
- 디자인·인쇄
텍스토
- 사진
아유림 스튜디오
- 표지 디자인
안영인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월간 『나라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경제』를 읽고 난 소감, 제안 등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nara@kdi.re.kr)로 보내주세요.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편엽서에 의견을 적어 다음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세 분을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나라경제팀

- 7월호 당첨자
강현숙(경기 시흥시)
박종명(경남 사천시)
임성희(경기 고양시)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기구독자에게는 1년치(12개월) 외에 추가로 2개월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0,000원
- 정기구독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s://nara.kdi.re.kr>

-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실질 GDP가 전년 대비 3.8% 성장해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4월 수출액 순위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5위로 올라섰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반도체 호황과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내수도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정책 효과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지표 호조에도 성장의 온기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라는 구조적 하방 압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이룬 성장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고르게 퍼지게 하고 잠재성장을 반등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잠재성장을 반등을 위한 방안들과 중동전쟁 이후의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중동전쟁 이후 대비하며 잠재성장률 반등 꾀할 것



김귀범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gbkim1@korea.kr

올해 상반기 전 세계가 중동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 빠졌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고유가와 공급망 교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가용 자원·수단을 총동원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의 정책 대응에 힘입어 성장에는 한층 탄력이 붙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성장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경상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7.1% 성장으로 3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 1~4월 수출액 순위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5위로 올라섰고, 1~5월 경상수지 흑자는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웃돌았다.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 전망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경상성장률은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청년·지방·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총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그러나 수출액, 성장률 등 경제지표 호조에도 성장의 온기가 반도체 등 일부 IT 업종과 수도권에 편중돼 내수와 비IT산업, 지역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구조적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이에 정

정부는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과 구조혁신을 가속화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새로운 시대의 발판을 만들어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해로 완성해 나가겠다.

부는 어렵게 살린 성장의 불씨를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확산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첫 번째 분야는 중동전쟁 이후 전략이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며 K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을 확보한다. 거시경제와 금융·외환·부동산 등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현재의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인재, 지방,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직면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체감 물가와 생계비 안정을 위해 힘쓰면서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 환변동보험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금리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 또한 지원한다.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K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도 본격 확충한다. 우선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으로 국내 생산을 촉진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우 비축을 늘리고, 국부펀드 등 인내자본과 연계해 해외 공급망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외 생산과 비축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대체수입 저리대출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도모할 것이다. 더불어 화석연료 의존 완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담은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을 본격화해 에너지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다.

비상경제 대응체계

K공급망 구축

3고(高) 리스크

국내생산세액공제

미래대응기금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두 번째 분야는 잠재성장을 반등이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신설 등 총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와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5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행한다.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피지컬 AI 선도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혁신과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 육성 기반도 강화한다. 투자형 R&D 도입,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방안 마련 등 도전과 성과를 중심으로 R&D 추진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하고 국부펀드를 통한 투자로 전략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성장의 지도를 지방으로 넓혀나간다.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금융·재정·세제·규제 등 7대 패키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등 세제·재정 지원으로 성장 기반도 공고히 한다.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 창출 등 청년 일자리 회복에 힘쓰고 혁신·첨단 산업으로 자금 흐르도록 금융 혁신 추진

세 번째 분야는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AI 대전환기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특

히 첨단산업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육성하고 민간과 공공에서 20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청년 일자리 회복에 주력하며, 청년형 ISA 출시 등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펼칠 것이다. 근로장려금(EITC) 소득 요건 완화 등 기준을 합리화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특별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성장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장·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것이다.

금융·공공·재정·세제·교육·규제 등 분야의 구조적 혁신도 본격 착수한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혁신·첨단 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의 물질을 바꾸고, 공공기관의 기능과 재정·조세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산업과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임은 강화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황과 수출 확대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바로 지금이 오늘의 기회를 내일의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바꿔나갈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잠재성장을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새로운 시대의 발판을 만들어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해로 완성해 나가겠다.

지난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3대 메가프로젝트

초혁신경제펀드

5극 3특 성장엔진

모두의 성장

청년형 ISA

국산 칩부터 인프라, 서비스까지 K-AI 반도체 풀패키지 생태계 구축한다



조경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kocho@korea.kr

전 세계가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주도권을 놓고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2년 차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퍼지는 ‘모두의 성장’을 국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다진 복원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향해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추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청년의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역 혁신성장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학습용 합성데이터 생산하는 월드모델 독자 개발하고 ‘모두의 AI’ 서비스 연내 출시해 AI 접근성 확대

먼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매진한다. 지난 6월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토른 팩토리라 불리는 ‘AI 데이터센터’에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범부처 지원 TF, 얼라이언스, 전담지원단 등 3대 민관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해 민간의 각종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번 투자를 기회 삼아 AI 데이터센터 전후방산업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수출 산업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피지컬 AI는 강력한 산업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을 가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2030년 세계 1강에 도전한



지난 7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퀀텀코리아 2026’에서
관람객들이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다. 피지컬 AI 학습에 꼭 필요하지만 아직은 희소한 ‘동작과 물리법칙이 결합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합성데이터를 대량 생산하는 월드모델 독자 개발에 착수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토대로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범용 피지컬 AI 모델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AI 모델을 아우르는 국산 피지컬 AI 플랫폼을 신속히 완성해 전 분야로 확산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AI 반도체 칩을 비롯해 인프라·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모두 국산으로 채운 K-AI 반도체 풀패키지 생태계를 구축한다. 대기업 제품 적용,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선도 구매 지원 등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사전 기획을 거쳐 현재 반도체가 마주한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는 극미세(1nm급 소자) 반도체 및 적층형(차세대 HBM) 반도체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한다. 우선 ‘모두의 AI’ 서비스를 연내 출시해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서비스를 비용부담과 이용량 제약 없이 제공한다. 정부 지원 안내는 물론 신청

AI 주도권 경쟁

합성데이터

국산 피지컬 AI 플랫폼

극미세 반도체

차세대 HBM

모두의 AI

까지 대행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도 탑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는 자원을 더욱 집중해 세계 최상위급 모델로 고도화하고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 국민이 AI를 한글과 산수처럼 쉽게 쓸 수 있도록 총 12개 부처가 합심해 연말까지 514만 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공공·민간의 AI 교육 콘텐츠를 연계한 AI 교육 통합포털(모두의 AI 배움터)과 전국 AI 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AI 교육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AI에 의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AI를 활용해 통신, 플랫폼 등 국민 생활·안전 분야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고, 우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보안에 특화된 AI 모델의 개발과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분야 연구에 AI 접목·활용해 국가 난제 해결하고 올 하반기 투자형 R&D 도입해 회수·재투자 환경 조성

세 번째로,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략기술 분야 연구에 AI를 접목·활용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양자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국산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양자 클러스터를 지정해 지역 기반의 양자기술 활용 사례 발굴·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AI·로봇 기반 자율실험 인프라를 구축(2026년 1개, 2027년 2개)하고, 암 특화 AI 모델 개발로 신약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2035년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 생산과 SMR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다. 또한 2030년대 전력 생산 실현을 목표로 핵융합 실증로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35년 실증로 준공을 위해 내년부터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관협력 모델 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해당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검토, 기업 매칭 비용 완화, 특허 우선 출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넥스트(NEXT)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R&D 혁신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투자형 R&D'를 도입해 기업 성장의 결과가 회수되고 재투자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실패 자산화 제도를 만들고, 연구기관 시스템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연계를 강화하며, 연구과제(IRIS)-연구비(Ezbaro·RCMS)-성과공개(NTIS) 시스템을 2028년까지 통합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계속 줄여나갈 것이다. 대학 연구기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국산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에서는
AI·로봇 기반 자율실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암 특화 AI 모델
개발로 신약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다.**

반에 투자하는 블록펀딩 도입, 정부 출연연의 공동 행정기능 전문화 등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축인 산학연의 역량도 높인다.

마지막으로, 청년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이제는 한 명의 인재가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시대다. 청년 성장사다리를 통해 청년 인재를 끊임 없이 지원한다. 과학기술원 부설 지역 영재학교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석·박사 국가장학금 대상을 1만 명으로 늘리며, 신진 연구자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우수 인재를 연내 600명 이상 유치하고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팀 발굴·지원, 4대 과학기술원 전체로 창업원 확대, AI 스타트업 투자 재원 2조 원 규모 확대, AI 모험펀드 신설 등 딥테크 창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전임 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은 물론 4대 과학기술원 및 정부 출연연 지역 조직의 교원, 연구원, 전담지원 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AI·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취업이나 인턴십과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AI와 과학기술을 지역 혁신성장의 기폭제로 삼기 위해 올해 8월부터 4대 권역 AX를 본격 착수하고, 내년에는 중부·강원·제주 지역을 추가해 전국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역 자율형 R&D를 대폭 늘리고, 지역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전용 기초연구 트랙 신설과 지역기업의 R&D 매칭 비용 완화 등 지역 R&D 생태계 활성화에도 노력한다.

반 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에 정책 추진 속도감을 높여 국민 체감 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㉞

양자 클러스터

소형모듈원자로(SMR)

넥스트(NEXT) 프로젝트

투자형 R&D

청년 성장사다리

지방우대지수 개발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



채경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chaeka@korea.kr

그동안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성장의 탄력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세계 경제기구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와 환율 및 금리 변동으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 대도약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라는 세 가지 방향 아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정부의 노력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국민의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지방공공요금 안정화하고 착한가격업소 확대해 민생부담 완화… 법인기부 도입, 주소지 기부제한 완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에도 최고가격제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하며 민생부담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물가 안정관리를 강화하려 한다. 우선 국민들의 필수 지출 항목인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힘쓴다. 지방정부와 협조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삼고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와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앞으로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각 부처가 소관하는 재정사업
등 각종 사업과 정책에서
비수도권에 충분하고 두터운 우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를 분산하고 인상 폭을 최소화해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다.

외식물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높여 지방정부가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회복을 위해 지방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기준이 될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한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삼고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와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앞으로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각 부처가 소관하는 재정사업 등 각종 사업과 정책에서 비수도권에 충분하고 두터운 우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단편적인 예산 배분을 넘어 고정된 격차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비수도권으로의 자원 유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학계와 지역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법인기부 도입, 주소지 기부제한 완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역균형발전

고향사랑기부제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햇빛소득마을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27일 구양리 햇빛발전소 풍경.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3천 개 조성해 농가 소득 창출하고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통해 정부 AI 사업 전 과정 관리 지원

한편 중동전쟁으로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경제안보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임을 보여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유향 부지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소득 보전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발전 수익을 공동체로 환원하는 친환경 이익 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30년까지 3천 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지원 체계와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부지 확보, 주민 조직화, 금융 조달 등 현장 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부지, 계통, 금융 등 분야별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고도화해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국가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행안부는 첨단 기술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주도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를 구현하고자 공공AX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AI 민주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AI 민주정부 실현전략’에서 제시하는 범정부 공공AX 추

진 방향을 기반으로, 전 부처가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공공AX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생성형 AI 기반의 ‘AI 정부24’와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연계한 대화형 서비스인 ‘AI 국민비서’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행정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공공조달, 안전을 위한 대기오염 분석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AI 민주정부의 핵심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신설된 ‘공공 AI 사업지원센터’를 통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공공 AI 사업 기획부터 이행,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기술적·정책적으로 전 주기 관리 지원하며, 민간의 전문 역량과 공공의 데이터·인프라를 융합한 혁신적인 AX 성공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 역동성의 기반이다. 행안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과제들을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민생 물가의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구조적 혁신과 균형발전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대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을 다져나가겠다.☞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공공AX

AI 민주정부

AI 국민비서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 초고속 이행 위해 총력 지원한다



박태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
thpark04@korea.kr

세계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다. 중동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시화되고 보호무역 장벽은 계속 높아진다. 경쟁국들은 턱밑에서 추격하고, 심지어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기회요인으로 꼽는 AI 혁명도 ‘빠르면 바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지만, 지금의 격랑은 세계경제가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산업의 판도 자체가 재편되는 구조적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존의 관성을 깨고 우리 산업의 기술주권과 미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절실한 이유다.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 산단 7곳에 M.AX 클러스터 조성…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위해 재정·기술 등 7대 지원 패키지 구체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4대 성장축과 2대 공간축으로의 산업·통상·자원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직면한 숏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대체불가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의 발로다. 4대 성장축의 첫 번째 축은 ‘성장 대도약’이다. 지난 6월 국민께 보고드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올인한다. 특히 초격차 유지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반도체는 전국에 클러스터가 신속히 구축되도록 총력 지원한다. 다음은 제조 AI 전환(M.AX)과 산업혁신을 통한 ‘성장 가속화’다. M.AX 확산을 기반으로 첨단·주력 산업을 고도화한다. 셋째는 산업·자원 안보체계 혁신을 통한 ‘성장 안전망’이다. 원유·나프타 도입 다변화를 위해 인센티브 및 장기계약 등을 활용하고 비축시설 증설, 국제공동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ODA, 현지 투자 등 국가 간 전략적 거래를 통해 핵심광물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넷째는 ‘함께 성장’이다. ‘산업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 등으로 협력업체 성장을 지원한다. 중견기업 맞춤 지원과 독자 기술 확보로 앵커형 중견기업을 확충한다. 올해 정주·문화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선도 산단 3개소를 조성하는 등 청년 세대 성장도 지원한다.

2대 공간축은 수도권에서 지방 중심으로 성장축을 옮기는 대내 과제와 경제영토를 넓히는 대외 과제다. 우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메가특구법’ 제정, 7대 지원 패키지 등을 통해 과감하게 지원한다.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 산단 7곳에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인프라의 AI·그린 전환도 지원한다.

경제영토 확장은 글로벌 산업 및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전략으로 구현한다. 정상외교 성과를 산업협력으로 구체화해 상대국 성장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 대미 전략투자 MOU를 이행하고,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동의 탈석유·산업다변화, 전후 석유·가스 생산 증대 등 산업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우리 산업이 4대 성장축, 2대 공간축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10대 주요과제를 선정·추진한다.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초고속 이행이다.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밀착 지원한다. 호남권 클러스터는 국민주권 정부 임기 내 생산을 목표로 올해 안에 사업 시행자 선정, 산단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반도체·로봇 인력 11만 명 양성 등 생태계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둘째, 지방주도 성장 핵심축으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지방정부, 앵커기업 등과 협의해 성장엔진(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재정·세제·금융·제도·인재·기술·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도 구체화한다.

셋째, ‘메가특구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화이트칼라 이그젼션(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 규제를 파격 완화하는 ‘메가특구법’과, 경제적·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법 제정 후 제1호 메가특구와 최고운영책임자를 조속히 지정한다.

M.AX 클러스터

4대 성장축

권역별 성장엔진

‘메가특구법’

화이트칼라 이그젼션

**‘메가특구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하고
제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선정**

넷째, 수출 5강 및 1조 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K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해 유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를 집중적으로 해결한다. 방산, 원전과 같은 전략품목에 대해 중장기 수출보험 등 올해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미국 「무역법」 301조 등의 관세조치에는 관세 합의 이익 균형 관점에서 적극 대응한다.

다섯째, M.AX 혁신 가속화다. 제조공정 50개를 AI 팩토리로 추가 전환하고 인력, 금융 등 지원이 담긴 ‘M.AX법’을 마련한다(「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 숙련인력의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 휴머노이드 실증도 추진해 제조업의 AX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전략성·사업성·상호이익을 기준으로 연내 제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국익을 고려해 조선, 에너지 등 양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미국 현지에서는 지난 7월 개소한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현지 사업을 지원한다.

일곱째,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와 석유·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이 주 재원인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개편하는 방안

을 검토한다.

여덟째, ‘산업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 착수다. 로봇, AI 조선소, OLED 공정 혁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협력업체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정부 1조8천억 원, 앵커기업 2조8천억 원 등 약 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신설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아홉째,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 제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산업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지원·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내에 법을 제정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 높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산업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 이전과 대규모 투자는 기술보호, 국내투자 연계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진짜 성과’를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장관 직속의 ‘정책성과특임단(정성단)’을 가동한다. 성과계적, 신호등 평가 등을 통해 지연·쟁점 과제를 신속히 조정한다.

『중용』 23장의 문구를 통해 산업부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본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 실행에 최선과 정성을 다해 2026년을 ‘대체불가 산업강국’의 원년으로 기억되게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다. 

지난 5월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로보티즈에서 열린 ‘제2회 M.AX 콘퍼런스’에서 관계자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역법」 301조

한미 조선협력센터

산업자원안보기금

산업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

5극 3특 중심으로 국토공간 개혁하고 3기 신도시 추진 가속화



소성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shso2001@korea.kr

국민이 경제를 체감하는 순간은 거창한 지표보다 집을 구할 때, 출퇴근할 때, 일자리를 찾을 때다. 어디에 살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느 지역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가 국민의 일상과 경제의 활력을 함께 좌우한다. 그런 점에서 국토교통정책은 민생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부터 회복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성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도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공간과 주거·교통·산업 전반을 개혁하고,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국토공간 대개혁을 중심으로 주거안정, 포용성장, 교통혁신, 미래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국토교통 분야 정상화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선호 입지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보증금 보호장치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현장 노동자 보호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 인구와 산업 기반이 약해지면 국가 전체의 성장 여력도 줄어든다. 균형발전은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전략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한다. 산업과 주거, 교육·문화 기능을 결합한

균형발전은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전략이어야 한다.
산업과 주거, 교육·문화 기능을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고,
기업 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고, 기업 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군공항 종전부지와 새만금 등 지역별 잠재력을 살린 산업거점을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세종 중심의 국가행정기능 강화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도 단계적으로 분산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안정은 가계 부담을 낮추고 소비와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는 경제의 기본조건이다.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도 안정적인 주거가

지난 7월 16일 인천대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의 비행 시연 행사에서 UAM 기체가 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균형발전

기업형 첨단도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3기 신도시

보증금 보호장치 강화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이 머물기 어렵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청년의 결혼과 출산, 가계의 소비 여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거안정은 민생과 성장기반을 다지는 주요 요소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공급 기반을 넓혀 나간다.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사업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유희부지와 비주택용지 등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증금 보호장치를 강화해 피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주거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할 것이다.

성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될 때 지속될 수 있다. 사고와 체불,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줄이는 것은 규제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산업의 생산성과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국토부는 지방의 노후·취약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체공사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발주자의 대금 직접지급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해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줄여 나갈 것이다. 화물차와 택배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도로 역주행과 지하차도 침수 등 생활 속 위험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두의 카드’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하고 DRT 활성화...

UAM 등 모빌리티 실증·상용화 지원하고 코레일·SR 통합 추진

교통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생활서비스이자 일자리와 관광·소비를 연결하는 경제 인프라다. 지역의 주요 거점이 편리하게 이어져야 주변 지역으로 사람과 투자가 확산될 수 있다. 국토부는 ‘모두의 카드’ 등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활성화해 출퇴근 부담을 낮춘다. 또한 주요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해 방문객의 이동이 지역 관광과 소비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교통약자와 비수도권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교통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누구나 이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건설은 이동수단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와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서비스를 확대하고, UAM과 이동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건설산업에는 AI와 로보틱스, 모듈러 공법을 확산해 노동집약적 구조를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한다. 해외건설도 단순 도급을 넘어 도시·철도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오래된 불편과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일이다. 공공서비스의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민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개혁이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해 철도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구조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거래와 정비사업, 건설현장의 불법·편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중고차 거래와 자동차보험 등 국민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은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섯 개의 과제는 서로 분리된 정책이 아니다. 지역에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성장전략이다. 여기에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혁할 때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성과가 경제지표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국민의 주거·교통비 절감과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성장의 지도를 넓히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보다 실행으로 답해 나가겠다. **국토**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심항공교통(UAM)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이동로봇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해 조선·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임창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lch1119@korea.kr

국민주권 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경제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중동전쟁이라는 악재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졌음에도 지난 6월 수출은 1,02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산업의 견조한 성장세와 증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증시 역시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 중동전쟁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생산·고용 위축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해양수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해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산물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했지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 과제도 한층 분명해졌다. 이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산업의 대전환과 재도약을 이끌 핵심정책을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하반기 업무보고’에 담아 추진한다.

‘고등어 특사단’ 파견 등 수산물 수급·가격 관리 강화하고

하반기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착공해 항만 운영에 AI 도입
먼저, 중동전쟁이 촉발한 고물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수산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등어는 정부가 직접 수입하거나 수매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또한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해 수입선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갈치, 오징



지난 7월 6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노르웨이 고등어가 진열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했다. © 연합뉴스

어 등도 정부가 직접 구매 후 할인 방출하며 공급량을 확대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 방침이다.

중동전쟁은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해수부는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에 해상 공급망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는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 필수물자를 운송하는 국가필수선박도 현재 88척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쟁 이후 본격화할 중동 지역 항만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체계를 미리 갖춘다. 아울러 올해 8~9월에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해 중동에 집중된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예정이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박 연료공급(병커링)에 성공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2차 실증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선박연료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부산항·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항·타코마항을 잇는 녹색해운 항로 실증사업 실시에 대비해 올 하반기에 세부 운영계획도 마련한다.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북극항로 시범운항

암모니아 추진선박 병커링

녹색해운 항로 실증사업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목표 가운데 하나로 잠재성장률 회복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AI와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원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제는 선박이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최적 항로를 판단해 운항하는 기술에 도전한다. 2032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해 우리나라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이다.

항만 운영에도 AI를 본격 도입한다. 그 출발점이 될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한다. 테스트베드가 완공되면 국내 기술로 개발한 AI 기반 항만 장비와 운영시스템을 실제 항만에서 검증할 수 있다. 이후 진해신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으로 관련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수산업에도 AI가 카메라로 어류의 행동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최적의 출하 시기를 제안하는 스마트 양식기술 적용을 본격화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AI 활용도 확대한다. 이안류(離岸流; 좁고 빠른 국지성 해류) 사고 예방 플랫폼과 선박 화재탐지 시스템 등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해 연안 지역 창업 활성화...

1,500건의 기존 어업 규제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정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해수부는 동남권에 자리한 유일한 중앙부처라는 강점을 살려 동남권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남부권 경제를 이끌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해수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1천억 원 규모의 중앙·지방·민간 공동 출자펀드를 조성해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동남권을 넘어 연안 지역 전반의 성장전략도 새롭게 마련한다. 5급 3특 권역별 연안경제 발전전략의 경우 올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시작으로 다른 권역의 발전전략도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나아가 연안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용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조성해 지역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산업구조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변화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하반기부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 우선 어업 관리체계를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에서 ‘잡는 양에 대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그물 길이와 같은 조업 방식을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어획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미 주요 어업 선진국들이 채택한 방식이다.

지난 6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토대로 이번 하반기부터 새로운 관리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약 1,500건에 달하는 기존 어업 규제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정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어업 구조개혁과 함께 노동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는다. 현재 어선과 염전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 취소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하반기에도 수산업 생산·유통 혁신과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 크루즈 관광객 170만 명 유치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지속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스마트 양식기술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모두의 창업’ 2기 본격 전개해 혁신 창업가 1만 명 발굴



진수용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담당관
rutovich@korea.kr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저력이 세계 무대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액은 1,200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무역 회복세를 이끌었다. 특히 K컬처의 영향으로 뷰티, 패션, 푸드 등 K소비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화장품 분야 수출은 2022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세계 무대를 향해 뚫어나가는 중소기업의 도약과 함께 국내에서는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창업 영토의 확장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 축이 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만 있다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도 현장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정착되면서 다양한 혁신 도전자들이 모여 창업 분위기를 이어가는 중이다.

고금리 대한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민생경제 유동성 공급…
제약·바이오·뷰티 혁신기업 본격 육성하고 AI 팩토리 고도화 지원
그러나 이와 같은 수출과 창업 성과 뒤에는 글로벌 고유가·고환율 기조의 장기화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내수 경기가 여전히 팍팍하다는 현실도 존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온누리상품권 할인 확대와 동행축제 개최 등 민생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버팀목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다. 이처럼 현장에서 축적해 온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안정, 초격차 성장,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첫째,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당면한 경영 충격을 완

지역의 창업 분위기가 민생경제
현장으로 번지도록 청년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로컬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고 판로를 넓힌다.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살린
골목상권을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지역상권’ 프로젝트로
골목상권의 안정을 돕는다.

화하고 민생경제의 유동성 공급에 주력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누적된 고금리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고금리 대한대출 지원 대상을 2025년 말 승인분까지 확대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인다. 아울러 고환율 여파로 원자재 확보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정책자금의 금리 인상 최소화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환율이 납품 대금연동제 산식에 반영되도록 기업 컨설팅을 강화해 원가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 수출 전선과 골목상권의 내수 진작을 돕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함께 실행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가능성을 증명한 K뷰티와 K푸드 등 유망 소비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계시장을 넓혀갈 수 있도록 ‘수출 성장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대규모 상생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확대 개최해 골목상권의 활력 증대를 돕는다.

둘째, 세계 무대를 선도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한다. 앞서 가동됐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를 본격 전개해 혁신 창업가 1만 명을 추가 발굴하고, 초기 멘토링부터 사업화 자금, 창업열풍 펀드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두텁게 한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신안보(한국형 인큐텔), K뷰티 분야의 혁신기업을 본격 육성해 신산업 강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현장 제조업의 근간을 바꾸는 지능형 혁신을 통해 신산업의 성장을 구체화한다. 우리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K소비재 수출 호조

모두의 창업

동행축제

긴급경영안정자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창업열풍펀드



지난 5월 13일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6 모두의 창업 캠퍼스투어 토크콘서트' 현장. © 중소벤처기업부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 팩토리 운영 고도화를 지원하고, 로봇·자동화 기술과 AI를 결합한 스마트 생산체계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역성장펀드 2030년까지 조성해 지역 유망 기업 집중 투자하고 올 하반기 '성장촉진형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셋째, 자본과 인재가 지역으로 모여드는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를 대규모로 조성해 자본이 지역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창업·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전국 어디서나 창업에 도전하고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혁신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8월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연계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나아가 4대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동시에 6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 창업 거점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창업 분위기가 민생경제 현장으로 번지도록 청년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로컬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고 판로를 넓힌다.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살린 골목상권을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지역상권' 프로젝트로 골목상권의 안정을 돕는다.

넷째, 경제 전반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책을 내실 있게 펼쳐 나간다.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성장촉진형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중소기업이 거둔 기술 성과가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틀을 다진다.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함께 양극화 극복의 핵심축인 청년층의 기회 확대와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안전망 보강에 역량을 모은다.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넓혀 나간다.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는 AI 기반으로 경영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맞춤형 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상생금융지수 평가에도 중소기업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해 금융권의 상생 참여를 유도한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지역 간 격차, 그리고 새로운 기술 대전환에 대한 준비 격차는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풀어야 할 거시적인 과제다.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반영된 핵심 과제들은 현장의 전 주기를 관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기업의 성장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는 단단한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성장펀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4대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

모두의 지역상권

여기는 부산항, 배 들어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순위 7위, 국내 물동량의 75%가 들어오는 항구, 세계 2위의 환적항만이자 전 세계 150여 개국 500여 개 항만과 연결된 부산항. 이런 부산항이 올해 개항 150주년을 맞았다.

부산항은 어떻게 지금의 성장을 이뤘을까?

먼저 입지. 유럽과 미국을 잇는 동서 항로와 러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오가는 남북 항로가 교차한다. 다음으로 기후. 태풍이나 악천후 등 비상 재난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 운영을 중단하는 포트클로징 시간을 합쳤을 때 부산항의 포트클로징은 1년 중 약 3일에 그친다. 짧게는 45일 길게는 70일까지 출입이 통제되는 중국 항만과는 비교된다. 여기에 북극항로까지 추가되면 부산항과 부산의 가치는 더 커질 예정이다.

『나라경제』가 부산항의 과거, 현재, 과제와 미래를 살피며 앞으로의 150년을 그려봤다.

입지, 환적 허브, 북극항로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부산항



박성제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 기자
psj19@yna.co.kr

부산항은 질곡의 역사 위에서 성장한 항만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데다가 영도와 오륙도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뛰어난 지리적 여건은 일찍부터 외세의 눈길을 끌었다. 그 전략적 가치는 결국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에 따른 강제 개항으로 이어졌다. 비록 외세에 의해 문을 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다. 개항 이후 부산항에서는 매립과 부두 축조 공사가 잇따르며 근대 항만의 기본 골격이 마련됐다.

150년이 지난 지금 부산항은 대한민국을 세계와 잇는 관문이자 동북아 물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북항, 신항, 감천항, 남항 등으로 구성된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 관문이다. 지난해에는 2,488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물동량을 처리하며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의 위상을 유지했다. 세계 주요 선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항만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부산항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15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입지다. 컨테이너선 항로는 버스 노선과 비슷해 한 항만에서 일정이 지연되면 이후 기항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선사들은 최적의 항로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거점 항만에 화물을 모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환적은 물류 효율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 부산항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환적에 최적화된 항만이다. 촘촘한 피더 네트워크(feeder network)를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서 들어온 화물을 모아 미주와 유럽으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 세계와 연결되는 260여 개의 정기 항로와 글로벌 선사와의 네트워크는 안정적인 환적서비스를 뒷받침해 준다.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부산항을 핵심 기항지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변 경쟁 항만과 비교하면 부산항의 경쟁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 항만들은 막대한 물동량을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촉발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항만과 항만 장비를 둘러싼 사이버·데이터 보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역시 우수한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자국 수출입 화물 처리 비중이 높아 부산항처럼 대규모 환적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이 중요해질수록 부산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부산항의 경쟁 상대는 이제 국내 다른 항만이 아니다. 북극의 얼음길이 열리면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중심 항만을 넘어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 물류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항로 물동량이 늘고 에너지·벌크 화물까지 아우르는 항만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커진다. 부산항 역시 2050년까지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과 항만 자동화를 추진하며 다가올 해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외세에 의해 강제로 문을 열었던 부산항은 지난 150년 동안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했다. 이제 부산항은 세계 해운의 흐름을 선도할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앞으로의 150년은 과거의 위상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항로를 구축하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부산항 신항 4부두 상공에서 바라본 전경. © 부산항만공사



부산과 부산항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전성현
동아대 사학과 교수
socequ21@dau.ac.kr

1965년 3월 19일 부산항구 모습. ©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부산이다. 1876년 부산항의 개항으로부터 근현대가 시작됐으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부산과 부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개항과 부산, 그 15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개항 이전의 부산(동래)은 전통적인 왕조 체제에서 행정적·군사적 변방에 지나지 않았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일명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부산을 통해 처음으로 근대를 경험하며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편입됐다. 부산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구일 뿐만 아니라 세계와 만나는 출구가 됐다.

개항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조선이 나서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다. 그럼에도 조선은 중국을 통해 시대 전환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수호조규 체결 당시 개항장의 관문 및 경계 설치를 제시했다. 나름 국익에 기반한 주체적인 관점에서 개항에 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힘과 그 체제의 침략적 이면(제국주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개항은 점차 한국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이 개항장이 되면서 일본 조계가 설정되자 일본은 이를 교두보 삼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부산은 일본의 침략 교두보로 재편되는 한편, 부산의 한국인들은 점점 외곽으로 내쳐졌고 일본인들은 자국민을 위한 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일본은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근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 공간을 새롭게 재편했다. 부두의 조성, 철도·전차의 부설 그리고 도시 시가지의 확장이 착착 진행됐다. 이 시기 진행된 도시화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민족적·계급적 차이가 반영돼 차별적이고 위계적이었다. 또한 일제의 대륙 침략에 따라 부산항은 무역항에서 병참수송 및 병참기지로 활용되며 군사 요새화됐다.

해방과 더불어 부산항은 대단위 인구 이동의 중심지가 됐다. 먼저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 주둔·거주하던 120만 명 이상의 일본 군인과 민간인들이 부산항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반면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태평양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징병·징용을 갔던 한국인 약 140만 명은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다수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떠난 지 오래돼 돌아갈 고향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귀한 동포'들은 부산에 남아 정착했다. 해방과 더불어 부산은 귀한 동포 20만여 명 이상을 포용한 도시로 전환됐다.

여기에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부산을 '피란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부산은 1953년 8월 15일까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전쟁에 의한 국가 위기 극복과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의 중심지였다. 또 항만과 철도 그리고 공항을 잇는 교통망을 중심으로 미군과 유엔군의 유일무이한 병참기지

로서도 기능했다.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구호와 원조를 통한 대한민국 재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 시기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해 왔다.

이처럼 부산과 부산항은 한국전쟁의 유일한 안전지대이자 대한민국 구호와 재건의 시작이며 중심이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전후 복구가 부산, 그리고 부산항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다. 이러한 재건과 성장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 세계 2위의 환적항이 됐다. 개항 150주년을 맞이한 올해 부산항 개항과 그 현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도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韓

365일 24시간 쉬지 않는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 환적 세계 2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단위: 만TEU)

2025년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

순위	도시명
1	상하이 🇨🇳
2	싱가포르 🇸🇬
3	닝보·저우산 🇨🇳
4	선전 🇨🇳
5	칭다오 🇨🇳
6	광저우 🇨🇳
7	부산 🇰🇷
8	텐진 🇨🇳
9	로스앤젤레스·롱비치 🇺🇸
10	제벨 알리 🇰🇪

자료: Alphaliner, 2025년 30대 항만, 2026

2025년 전 세계 환적 항만 순위

순위	도시명	환적 화물 (단위: 만TEU)
1	싱가포르 🇸🇬	4,020
2	부산 🇰🇷	1,410
3	탄중 텔레파스 🇲🇾	1,336
4	상하이 🇨🇳	1,101
5	당헤르 메드 🇲🇪	1,034

자료: 부산항만공사 자료 재가공, 2026

주요 항구 도시 선석 생산성 비교

순위	도시명	생산성
4	상하이 🇨🇳	110.7회/h
15	선전 🇨🇳	87.4회/h
16	두바이 🇰🇪	86.9회/h
20	싱가포르 🇸🇬	80.0회/h
26	부산 🇰🇷	75.1회/h
40	홍콩 🇬🇰	66.4회/h
45	가오슝 🇹🇼	64.0회/h
65	요코하마 🇯🇵	58.2회/h
66	로테르담 🇳🇱	57.6회/h
78	함부르크 🇩🇪	54.5회/h

주: 선석 생산성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한 시간 동안 크레인이 시간당 컨테이너를 처리한 횟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데이터로 본 부산과 세계 주요 항구 도시」, 2026.6

주요 항구 도시 항만연결성지수(PLSCI) 비교

순위	도시명	지수
1	상하이 🇨🇳	2,409.2
3	싱가포르 🇸🇬	1,836.1
4	부산 🇰🇷	1,651.6
9	홍콩 🇬🇰	997.1
10	로테르담 🇳🇱	967.8
13	가오슝 🇹🇼	861.7
14	선전 🇨🇳	819.1
15	두바이 🇰🇪	804.5
17	요코하마 🇯🇵	729.5
19	함부르크 🇩🇪	697.2

주: 항만연결성지수는 전 세계 항만을 대상으로 정기선 입항 빈도, 직항 노선 수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지수로 글로벌 해운네트워크의 연결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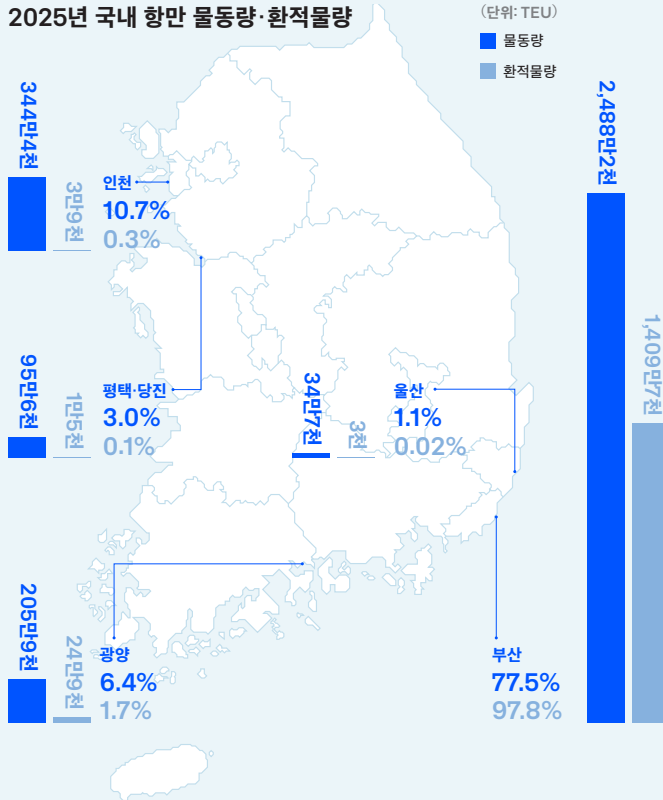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데이터로 본 부산과 세계 주요 항구 도시」, 2026.6

2025년 부산항-국가별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자료: 부산항만공사 자료 재가공, 2026

2025년 국내 항만 물동량·환적물량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 컨테이너 화물 처리현황, 2025

2025년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7.5%,
환적물량의 97.8%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

1st

환적 화물은 전체 물동량의
약 57% 차지,
세계 2위 환적 항만

2nd

부산항 연간 입항척수
4만3천여 척

4만3천

부산항 기항 정기노선
세계 4위(2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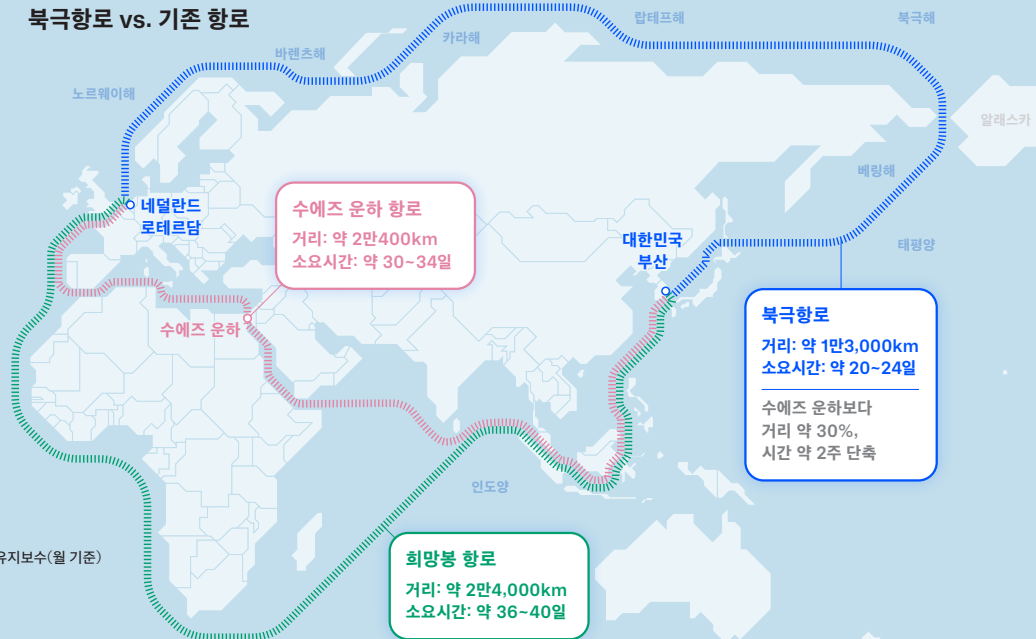
4th

자료: 국가데이터처, 「데이터로 본 부산과 세계 주요 항구 도시」, 2026.6, 부산항공사 자료

북극항로란?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지나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경로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고
수에즈 운하 주변 지역의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서 북극항로
개발에 관심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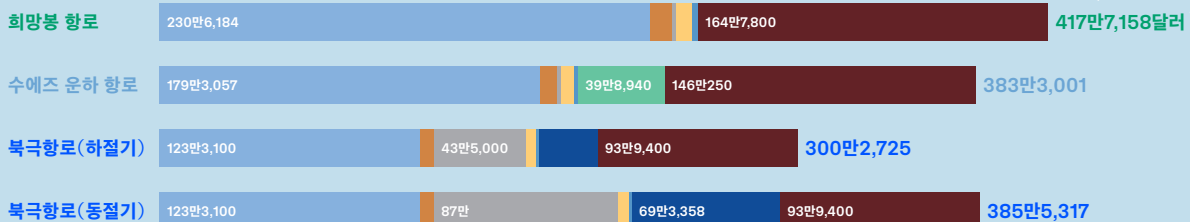
북극항로 vs. 기존 항로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이용 경제성

항로별 1회 운항 비용

■ 연료비 ■ 선원임금 ■ 보험(선가기준) ■ 유지보수(월 기준)
■ 항만 이용비(1회 기준) ■ 수에즈 운하 통과비
■ 북극항로 채빙선 이용비 ■ 용선료



자료: 국회도서관, 「Data&Law: 데이터로 보는 북극항로」, 2025.8

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부두에 사람이 없다...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부산 신항



지난 7월 15일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에서 바라본
부산항 신항 7부두 전경.

7월 15일 오후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신항 7부두의 무인 크레인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은 대형 선박 2대가 정박해 있었다. 파란색 컨테이너 크레인(STS)이 한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중이었다. 이 컨테이너를 무인 이송 장비(AGV)가 컨테이너 야드로 옮겼고, 주황색 야드 크레인(ARMGC)은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앞뒤로 이동하며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었다. 트럭 위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데 5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빈 공간으로 다음 트럭이 후진 주차를 했고, 야드 크레인이 또다시 움직였다.

부두에는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럭의 운전자 외에 사람은 없었다. 하역, 이송, 적재 등 모든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됐다. 배소운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 경영기획팀 대리에 따르면 자동화의 핵심은 STS에서 야드로, 야드에서 STS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AGV다. 다른 부두에서는 유인 이송 장비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옮기지만 7부두에서는 AGV가 2m 간격으로 심은 센서를 인식하며 컨테이너를 옮긴다. 자연스럽게 일자리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DGT는 북항에서 신항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발생한 일자리를 기존 항만 노동자들에게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최초로 AGV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부산 신항 7부두의 또 다른 특징은 국산 장비 활용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크레인은 글로벌시장의 30~40%를 장악할 정도로 규모가 컸지만, 최근 들어 값싼 중국 크레인들에 밀려 항만에 도입되지 못했다. 그런데 무인 자동화, 스마트화에는 국산 장

비가 필수다. 크레인 운영체계를 고도화하려면 크레인의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요구된다. 하지만 외제차를 사설업체에서 수리한 후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을 수 없는 것처럼 크레인에 직접 손을 대면 제작사가 더 이상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산화가 필수인 셈이다.

자동화 항만이 되고 나서 악천후로 인한 항만 셧다운을 제외하고는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이 됐다. 효율성은 20~30% 높아졌고 일정한 작업 속도를 유지해 연속성이 좋아졌다.

DGT는 AI를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항만을 운영하려 한다. 박정재 DGT 사업지원실 실장은 AI를 활용해 컨테이너 작업 속도를 높이는 게 대표 과제라고 했다. 야드에 배치된 컨테이너는 보통 3일 정도 보관된다. 3일 이후부터는 항만 이용료가 청구돼 대부분 그 전에 나가기 때문이다. 화주는 빠르면 하루 전, 짧게는 몇 시간 전에 컨테이너를 가져가겠다고 항만 운영사에 연락하는데, 곧 나갈 컨테이너 위로 컨테이너가 쌓이게 되면 해당 컨테이너를 내보내는 시간이 지체된다. DGT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주별 컨테이너 수령 시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컨테이너를 재배치해 작업 속도를 높이려는 중이다. 또 하드코딩 상태의 AI를 변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나라경제』가 방문한 날과 달리 비바람이 치는 날에는 부두에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크레인을 고정하는 것도, 최대 6단까지 쌓이는 컨테이너를 묶는 것도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아직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AI 기반 R&D 사업으로 항만의 AX 전환을 끌고 있는 연정흠 부산항만공사 글로벌사업단 연구개발부장을 만났다.



연정흠

부산항만공사 글로벌사업단
연구개발부장

항만 무인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인력 부족이다. 부두 현장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는 등 항만 노동이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명사고도 자동화 이유 중 하나다. 요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항만안전특별법」으로 작업 현장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무인화·자동화는 인명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이다. 항만 장비제작 기술력 향상으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운영방식에서 전기 구동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져 친환경적이다.

무인 자동화로 안전한 항만이 됐나?

유인 작업하던 크레인만 무인 자동화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았다. 대표적으로 와이어로프 단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조종사가 있을 때는 와이어로프가 “늘어난 것 같다”, “소리가 난다”며 와이어를 정비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크레인은 말이 없다. 3천 시간 사용 후 점검·교체한다는 주기가 있지만 그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크레인이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운영되다 보니 4년 전쯤엔 1,800시간 만에, 재작년에는 800시간 만에 와이어가 끊어졌다. 또 사람이 함께 일할 땐 무전기나 핸드폰으로 “지금 화물 내리니까 비키라 해”라고 말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무인 크레인은 말 없이 화물을 내린다. 컨테이너를 내리는 지점에 사람이 있는지 센서가 감지하지만, 해무가 끼거나 비가 쏟아지거나 어두울 때는 감지 센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제를 추진 중인가.

앞서 말한 항만 크레인 와이어로프 결함을 탐지하기 위해 AI 기반 와이어로프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콘이 비뚤어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비전 AI 기술도 도입했다. 그밖에도 풍속 20m/s 이상에서 로봇팔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결박하는 기술, 플레이트 체결 기술, 냉동컨테이너 전원 연결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은 사람이 컨테이너에 트루스트 락(고정장치)을 체결하는데, 컨테이너 아래에서 작업하는 건 위험한 일이

다. 또 감전위험을 무릅쓰고 430볼트의 고압 전원 콘센트를 냉동 컨테이너에 꽂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피지컬 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 개발 중이다.

기술개발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게 힘들다. 항만과 관련된 기술이나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부산·경남이 아닌 서울·경기에 있더라. 그래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공동으로 ‘1876 부산’이라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창업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해운항만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다. 또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진행한 디지털 트윈 사업은 신항의 1개 부두를 대상으로 개발에 성공했으나, 부산항 전체 부두로 확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항만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항만 배후 물류다. 부산과 창원에 위치한 부산항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교통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은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없다. 추후 사업이 확장되면 내륙까지 연계해 배후 물류 기능을 최적화하려 한다.

AX 전환의 목표가 있다면?

AX 전환으로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고 안전사고를 1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또 2030년까지 전 세계 3위 스마트 항만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부산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가 멈춘다고 생각한다. 항만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앞으로의 150년을 이끌 경쟁력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정서현 『나라경제』 기자

위 사진은 항만 자동화 기술의 핵심인 무인 이송 장비(AGV). © 부산항만공사
아래는 야드 크레인이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모습.



다음 도전은 탄소중립... 2050년 '넷제로' 달성 위한 3가지 과제



김보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kimb@kmi.re.kr

지난해 7월 23일 부산항 신항 2부두에서 MSC CALAIS호에 친환경 선박 연료인 LNG 병커링을 실시하는 모습. © 부산항만공사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사회 전반의 공통 과제가 됐다. 여기에 항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주요국은 2050년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 탄소중립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배출 저감 이행을 위한 각종 수단을 마련해 실천 중이다. 이에 더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부문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항만은 자체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동시에 산업 생태계 내 탈탄소화를 지원해야 하는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항과 로테르담항 등 글로벌 선도 항만도 다중연료 병커링, 육상전원 공급, 재생에너지 및 녹색 해운 항로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시작으로 항만 분야의 대응이 본격화했다. 부산항 역시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하고 탄소배출 저감 및 관리, 에너지자립, 친환경 운영체계 도입 등의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을 통해 권고속도를 준수하는 선박에 항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환경선박지수(ESI)에 기반한 인센티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접안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을 줄이기 위한 육상전원 공급설비(AMP)를 확충하고,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녹색해운 항로 협력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일부 이행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2024년 국내 최초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방식의 하역과 LNG 병커링 동시작업이 이뤄져 병커링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향후 이러한 경험을 암모니아와 메탄올 등의 연료로 다변화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다양한 친환경 연료 병커링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2032년까지 부산항 신항 내 병커링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항만 장비 전동화에 대응한 에너지 전환도 필요하다. 부산항은 2024년 국내 최초로 전 영역 자동화 터미널(부산항 신항 7부두)을 개장해 100% 전력 기반 장비 운용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개발되는 진해신항 역시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조성될 계획이다. 반면 전기 추진 친환경 장비 확대는 전력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기에너지 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과 활용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한 후 이에 따른 감축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부산항 신항 1~5부두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편입됨에 따라 온실가스 관리가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이는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항만의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이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를 수 없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항만 당국이라는 개별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항만은 터미널 운영사, 선사 등 다양한 주체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된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만의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항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다. 부산항은 국내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환적화물 처리 규모를 보유한 글로벌 항만이다. 이러한 글로벌 위상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다. ■

수에즈 항로가 키운 싱가포르항, 북극항로가 키울 부산항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선장
captainihkim@korea.edu

지난 3월 11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 입구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석유제품 운반선. © 연합뉴스



15세기 말 유럽인들은 향신료와 비단 등 아시아의 상품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 나섰다. 대항해시대의 시작이다. 희망봉을 거쳐 인도로 향하는 항로가 개척되면서 세계 해상교역의 중심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고, 항구의 흥망과 국가의 부 또한 새롭게 재편됐다. 새로운 바닷길은 언제나 새로운 항만을 성장시켰다. 이후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는 더욱 짧고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그 중심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항만이 싱가포르였다.

수에즈 항로 시대에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관문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들이 반드시 거치는 세계적인 기항지로 성장했다. 선박들은 이곳에서 연료를 공급받고 선용품을 조달하며 승무원을 교대하고, 선박 수리와 금융, 보험, 법률서비스까지 이용했다. 항만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서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해운 허브로 자리 잡았다. 항만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항만의 경쟁력은 단순히 물동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박이 기항하면서 창출하는 연료 공급, 선박 관리, 수리, 해양금융, 해상보험, 해상법률서비스 등 해양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항만의 진정한 경쟁력을 좌우한다. 북극항로 시대 부산항의 새로운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극해를 통과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 경로인 북극항로는 이러한 해상교역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바꿀 가능성을 갖고 있다. 북극해를 통과하면 아시아와 유럽 간 운항거리가 기존 수에즈 항로보다 크게 단축된다. 항해시간과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잠재력도 매우 크다. 아직은 계절적 제약과 쇄빙선 지원, 항행 안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기후변화와 선박기술의 발전으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필자도 선장 시절 유럽 항로를 운항하면서 마지막 기항지에서 연료를 보급하고 선용품을 공급받으며 승무원을 교대하는 과정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항만은 단순히 선박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북극항로 시대에는 이러한 경제적 기능이 부산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북극항로가 본격 활성화된다면 부산항의 전략적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부산은 북극으로 향하는 전략적 거점항이자 동북아 최대 환적항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가 수에즈 항로에서 누려왔던 기항지의 경제적 가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부산이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선박의 병커링, 선용품 공급, 선박 관리, 수리, 해양금융, 해상보험, 해상법률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부산항은 동북아 최대 환적항으로서 축적된 물류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산업은 쇄빙선과 내빙선 건조를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해운·항만 운영 경험과 우수한 해기사 및 해양 전문인력은 북극항로 시대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 시행을 통해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에 더해 해양서비스산업과 국제협력, 안전한 항해 체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바닷길은 언제나 새로운 항만의 시대를 열었다. 희망봉 항로는 대서양 시대를 열었고, 수에즈 운하는 싱가포르를 성장시켰다. 북극항로 역시 부산항의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극항로의 미래는 곧 부산항의 새로운 가치이며,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㉞

우리는 선진국민일까?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jinpark@kdischool.ac.kr

**우리가 시민의식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서구형 문화를 닮으려는
것이 아니다. 낮은 시민의식이 불신을
키워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민교육 강화, 법치주의 확립,
정부의 투명성 제고, 지방분권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싶다.**

우리는 선진국민인가? 선진국민이란 정의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사회적 신뢰, 시민참여, 관용성, 공공성, 책임성이 높은 국민이라고 생각된다. 전 세계 80여 개국의 가치관을 조사하는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전 세계를 [전통적 가치 vs. 합리적 가치], [생존 가치 vs. 자기표현 가치]의 두 축으로 나눈다. 전통적 가치로는 종교, 가족, 권위가 중시되는데, 한국은 그 반대편인 합리적 가치가 앞서는 사회다. 한편 생존 가치는 물질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자기표현 가치는 생존에 대한 우려를 벗고 삶의 질과 타인에 대한 관용·신뢰를 보인다.

소득 높은데도 '생존 가치' 중시하는 한국,

봉사, 사회적 유대감 등 시민의식은 OECD 평균 미달

선진국일수록 대체로 자기표현 가치를 중시하는데, 한국은 소득이 높은데도 생존가치를 훨씬 더 중시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관용이 낮다는 뜻이다. 2017~2020년 WVS 자료를 이용해 한국, 미국, 칠레 등 16개국의 사

회적 신뢰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우리의 신뢰수준은 지인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이지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였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16개국 중 그리스,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tribe)은 중시하나 타 부족은 배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성향은 높은 인구 밀도에서 각자도생으로 빠른 성장을 추구한 것이 배경이 아닐까 생각되며, 앞으로 소득이 더 상승하고 사회보장이 확대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시민의식을 비교해 보자. OECD는 시민의식을 “사회 구성원이 공공 문제에 참여하고 민주적 가치와 규칙을 옹호하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책임 있게 관여하려는 능력과 의지”라 정의한다. WVS의 자기표현 가치에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투표참여 중요도, 세금납부 중요도, 법·규칙 준수 중요도 등 8개 항목으로 우리의 시민의식을 측정하는데, 종합지표가 2022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각종 OECD 보고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등에 따르면 우리는 시민의식을 구성하는 자발적 시민단체 참여율, 봉사활동, 사회적 유대감, 기부, 이질성에 대한 포용성 부문에서 모두 OECD 평균에 미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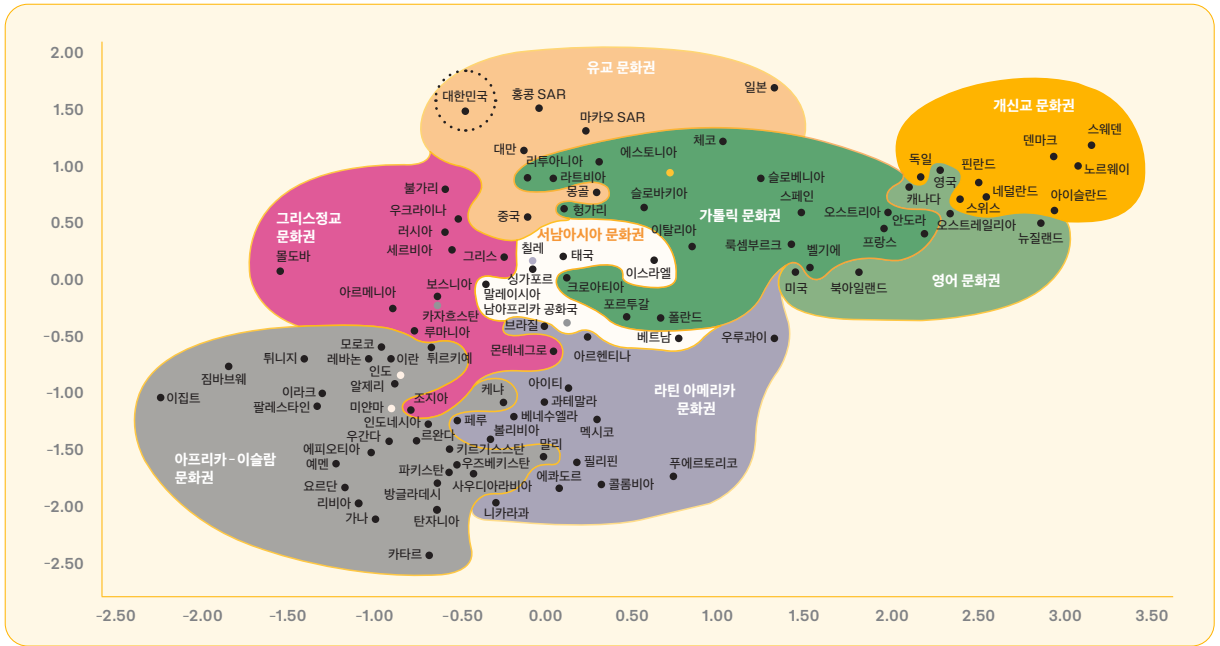
이러한 지표에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대학진학률이 74%로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을 보이며 높은 정보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금 모으기 운동, 코로나19 방역 협조, 줄 서는 문화 등에서는 높은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다. 또한 휴대폰을 카페에 방치해도 무방하고, 밤길을 걸어도 위험하지 않으며, 지하철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 준법정신도 높다.

카페에서 휴대폰을 방치하는 한국에서 왜 사회적 신뢰가 낮은 것일까? 우리가 휴대폰을 방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CCTV 등 높은 감시율을 믿기 때문이다. 처벌 내지 체면손상을 우려해 규칙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은 경쟁상대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긴다.

지난 3월 21일 서울 한화문 광장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의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이 끝난 뒤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다.
© 연합뉴스



전통적 가치 vs. 합리적 가치



생존 가치 vs. 자기표현 가치

자료: 세계가치관조사(WVS) 및 유럽가치관조사(EVS), 일부 국가 편집

분리수거는 잘하지만 길거리 담배꽂이는 넘치는 한국?

사적 관계에선 정·신뢰 주지만 공적·익명적 관계는 외면

전 세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장 성실히 하는 한국의 길거리 화단에 왜 담배꽂이가 넘쳐나는가? 한국은 국가-개인 사이의 규범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편이나 법적 처벌과 무관한 자율적인 시민규범에 대한 존중은 낮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동도덕을 시민 간 약속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강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공익을 위해 줄 잘 서는 한국인이 왜 30분 동안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을까? 새치기같이 바로 위반이 확인되는 공공질서는 체면 유지를 위해 잘 지키지만, 공회전은 차안에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고 피해 계층이 특정되지도 않으며 단속도 없기 때문이다.

정(情) 많고 부의금·축의금을 잘 내는 한국인이 왜 기부에는 인색한가? 이는 한국인이 사적 상호주의는 중시하나 익명의 기부 수혜자와는 직접적·지속적 상호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기부를 담당하는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탓도 크다.

낯선 외국인에게 친절한 한국인인데 왜 문화적 수용성은 떨어지는가? 한국인은 외국인을 손님으로 보고 잘해주는 것일 뿐 그들의 이질성을 포용한 것이 아니다. 외국인이 일상의 영역에 들어오면 한국 문화에 동화되기를 요구한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의 국민참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슬픔 연대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 유대감은 낮게

나오는가? 우리는 일시적인 사건에 대한 정서적 응집력은 높으나 다른 가치관을 수용하거나 나의 이해관계를 나누는 이성적 응집력은 약하기 때문이다.

1997년 경제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하던 한국인이 왜 세금을 내는 데는 인색할까? 한국과 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세금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 그러나 한국인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단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 위기 시에는 나의 '부족'이 국가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인은 사적 관계에서는 상호주의를 기대하며 정과 신뢰를 주지만 공적·익명적 관계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이다. 공적 관계에서는 정부가 상호주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 보니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최근 OECD의 '공공 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6위로 약진했다. 미래는 밝다.

우리가 시민의식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서구형 문화를 닮기 위해서가 아니다. 낮은 시민의식이 불신을 키워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민교육 강화, 법치주의 확립, 정부의 투명성 제고, 지방분권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싶다. 지방분권은 의사결정 단위를 축소하므로 구성원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아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는 선진국을 달성했다. 이젠 선진국민이 될 차례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싸게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칩을 만들 겁니다”

김주영

하이퍼엑셀 대표

“칩이 나오면 처음엔 그냥 벽돌입니다. 이걸 깨워서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시작이죠.”

서울 강남 하이퍼엑셀 사무실에서 만난 김주영 대표는 손바닥만 한 반도체를 들어 보였다. 지난 3월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서 나온 이 칩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기본 동작 검증과 소프트웨어 구동을 마쳤다. 이름은 ‘베르다(Bertha)’.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의 추론에 특화된 프로세서인 LPU(LLM Processing Unit)다. 엔비디아가 장악한 AI 반도체시장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LLM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 ‘베르다’ 개발...

HBM 대신 저전력 메모리 활용해 전력 효율 극대화

김 대표는 카이스트(KAIST)에서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마친 국내파다. 2010년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연구소로 건너가 8년여를 일했다. 2013년경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를 초기부터 연구한 경험이 창업의 밑거름이 됐다. “미국의 트렌드는 한국보다 2~3년 빠릅니다. 그 흐름을 먼저 타본 것이 큰 자산이 됐습니다.”

2019년 모교 교수로 돌아온 그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AI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학생 5~6명,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LLM 가속 시스템을 연구했다. 2022년 국제 학회 핫칩스(Hot Chips)에 시제품을 전시하자 미국의 반도체 대기업 AMD가 먼저 다가왔다. 그들은 “요즘 트랜스포머 가속 시스템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곳은 너희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그 직후 챗GPT 열풍이 불었고, 2023년 1월 창업했다. 교수가 창업하면 눈총받던 시절은 지나갔다. 현재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에서만 창업한 교수가 10명이 넘는다. 그도 겸직으로 강의를 면제받아 회사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스타트업은 새로운 워크로드(workload)가 나올 때 태어납니다. 2000년대 초 모바일 붐 때도 한국에 AP 팹리스가 많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온 사이클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워크로드는 칩이 처리해야 할 연산의 종류와 패턴을 뜻한다. PC 시대에는 CPU가, 스마트폰 시대에는 모바일용 AP가 성장했듯이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워크로드가 새로운 반도체의 기회를 열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가 주목한 새로운 워크로드는 AI였다. 그중에서도 무게중심은 추론으로 옮겨가고 있다. 모델을 만드는 ‘학습’보다 만들어진 모델로 서비스하는 ‘추론’에서 돈이 나오는 시대가 됐다. 추론이란 챗GPT, 클로드 등이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일이다. 일반 대중의 AI 사용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지금, 당연히 추론량 또한 엄청나게 늘고 있다. 2030년에는 AI 반도체시장의 80%를 추론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러 단계를 거쳐 생각하는 추론형 AI와 AI 에이전트 사용이 확산되면서 서비스가 쓰는 토큰의 양도 폭발하고 있다. 결국 정해진 돈과 전력으로 얼마나 많은 토큰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LPU는 GPU와 구조부터 다르다. 쉽게 말해 GPU

가 범용 AI 연산을 위한 칩이라면, LPU는 LLM 추론만을 위해 설계된 전용 칩이다. GPU가 작은 코어 수천 개를 병렬로 활용하는 구조라면, LPU는 트랜스포머 연산 전체를 처리하는 큰 코어 수십 개로 구성된다. 데이터가 한 번 흐르기 시작하면 토큰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물 흐름’ 같은 구조다. 추론의 심장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것이다.

또 하나의 승부수는 역발상이다. 모두가 고성능 메모리 HBM에 매달릴 때 스마트폰에 쓰는 저전력 메모리 LPDDR을 서버용 AI 칩으로 채택했다. “GPU와 똑같이 HBM을 쓰면 승산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일반적인 GPU의 실제 대역폭 활용률은 50~60% 수준인데 하이퍼엑셀은 LLM 연산에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주어진 메모리 대역폭의 약 90%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HBM과 첨단 패키징을 사용한 AI 가속기보다 제조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으며, 목표 가격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도 250와트로 최신 GPU의 3분의 1 수준이다. “빅테크 소속 지인들도 ‘300와트 이하 그 정도의 성능이면 써볼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속기 하나가 2천 와트를 향해 가는 시대라 전력이 진짜 문제거든요.”

3년 만에 직원 90명, 누적 투자 610억 규모로 성장...

초기 시장 뚝을 국가 레퍼런스와 인재 확보가 과제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가 자체 칩까지 만드는 시대에 스타트업이 파고들 틈이 있을까. 그는 냉정하게 본다. 빅테크의 문은 좁지만 공랭식(air-cooling)을 쓰는 중소형 데이터센터, GPU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네오클라우드와 소버린 AI 수요는 열려 있다는 것이다. “작은 틈새 같지만 그래도 수십억 달러 시장입니다. 의미가 있죠.”

사업도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올해 가을부터 대기업들과 실증을 거쳐 이듬해 양산·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창업

3년여 만에 직원 90여 명, 누적 투자 61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는 양산과 사업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반도체는 스타트업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지금 한국에는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주목받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10곳도 넘는다. 모두 국내외 명문 공대, 글로벌 대기업 출신의 반도체 인재들이 창업한 회사고,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도 유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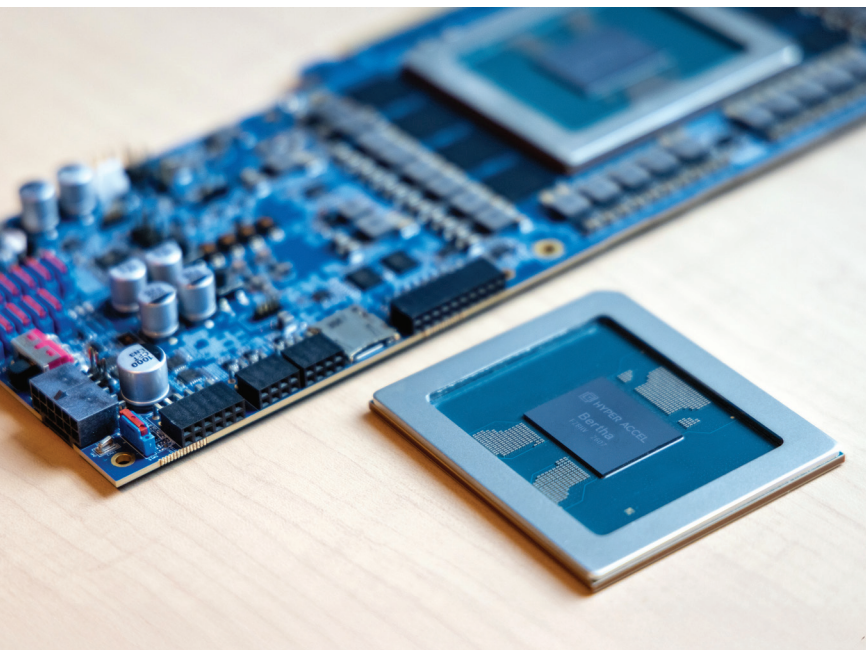
“AI 반도체 설계는 전자, 전산, 패키지, 물리까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제조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 대만, 이스라엘 정도뿐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강국으로만 알려졌지만 모바일 AP 시절부터 쌓인 로직 반도체 역량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창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는 인재다. 반도체 대기업들이 높은 보상으로 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떠나는 주니어들이 생기고 있다. 김 대표는 AI와 반도체 설계를 함께 아는 인재를 학교에서 직접 길러 데려오며 버티고는 있지만, 생태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고할 모델로는 대만을 꼽았다. “TSMC가 형님 역할을 하되 작은 회사들도 다 같이 가는 생태계입니다. 우리도 생태계 차원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켜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젊은 인재들의 눈이 달라졌다. 학교에서는 몇 세대 전인 28나노 공정을 쓰지만 스타트업에서는 4나노 최첨단 공정을 다뤄볼 수 있어 학생들이 오히려 스타트업을 반긴다고 한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초기 시장이다. “새로운 칩은 누군가 써줘야 큼니다. 엔비디아 블랙웰도 안정화에 1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내놓는 제안은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토큰 팩토리’다. 국산 AI 반도체로 채운 센터에서 연구자들 일반 이용자들 누구나 싼값에 AI를 쓰게 하자는 것이다. “미국에 가면 ‘이거 누가 써봤느냐’부터 묻습니다. 국가 레퍼런스가 생기면 해외 진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반도체 창업의 사이클에서 김 대표는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대신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더 비싸고 더 강력한 칩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더 싸게 AI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칩이다. AI 시대의 승부가 성능이 아니라 효율에서 갈린다면 승산은 충분하다. 그의 역발상이 한국 AI 반도체산업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하이퍼엑셀이 개발한 AI 반도체 ‘베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estima7@gmail.com

AI와 미래 ②



진화한 불평등, AI 격차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해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했다. 여러 유·무료 AI가 제출한 과제의 결과는 뚜렷했다. 무료 버전의 AI를 활용한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간략한 결과를 짚어주는 수준인 반면, 월 30만 원의 프리미엄 AI 모델은 풍부한 자료와 명확한 출처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AI 모델 활용 격차는 개인의 성적, 학력, 더 나아가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별 격차로 확대될 수 있다.

AI 활용 격차의 파급효과는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지난 2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AI 활용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흥국의 실질 GDP 수준은 향후 10년 이후에는 선진국보다 2%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활용이 개인·국가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정책적 대응은 필수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AI 활용 격차의 현황을 짚고,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정부의 AI 격차 해소방안을 다룬다.

미국에선 반AI 세력 결집 중... AI가 불러온 양극화의 비극



최지원
동아일보 산업1부 기자
jwchoi@donga.com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구축 및 고성능 AI 개발 경쟁이 뜨겁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에서 개발한 고성능 AI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보고 수출을 통제하는가 하면, 기업들도 AI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개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성능 AI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반(反) AI'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이들은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류의 불평등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움직임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대학생 모레노 가마는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반AI 선언문'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언문에는 AI가 인류에게 가하는 위협이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어 인류의 절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건에는 오픈AI를 포함해 여러 AI 기업 임원 및 투자자 등의 이름이 적힌 'AI 살생부'도 포함됐다.

용의자가 AI 살생부까지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실리콘

밸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간 링크드인과 같은 SNS를 통해 주요 AI 기업 핵심 엔지니어의 얼굴과 동선을 파악해 미행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AI 기업들은 임원들의 경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요 AI 개발 기업의 CEO들은 적게는 수십억 원부터 많게는 200억 원 이상까지 경호 비용을 늘렸다.

전문가들은 반AI 세력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나선 데는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AI 개발 인프라 공급망에 포함된 산업 및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도 사회를 분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2026 글로벌 AI 일자리 바로미터(2026 Global AI Jobs Barometer)」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을 보유한 직원의 임금이 그렇지 않은 직원의 임금보다 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연봉의 엔지니어들로 인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며, AI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AI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몸값이 오르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양극화, 즉 'K자형' 경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DS)가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올리며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인당 5~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돼 회사가 위치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집값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수준의 성과급만을 받게 돼 한 회사 내에서도 극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김형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양극화 현상이 점차 다른 지역, 국가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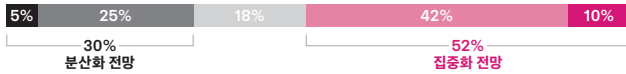
지난 4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로널드 V. 델럼스 연방정부청사 법원 앞에서 사람들이 AI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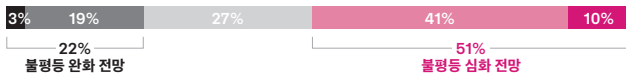
응답자 79%, “AI 활용 능력이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것”

생성형 AI는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경제적 힘의 분배



경제적 불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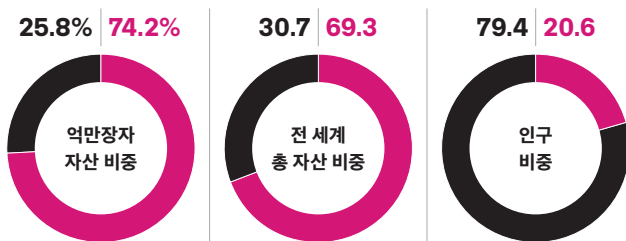


자료: 딜로이트, 2024.1

글로벌 불평등과 AI

■ 글로벌 노스 ■ 글로벌 사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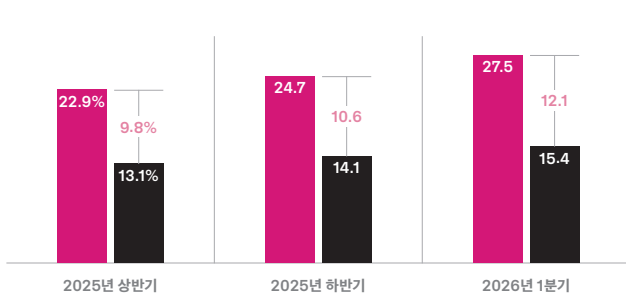
글로벌 부의 불평등



주: 글로벌 노스는 우리나라, 일본, 북미 등 선진국을 가리키며
글로벌 사우스는 중국, 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또는 개도국이 속함.
자료: 옥스팜, 20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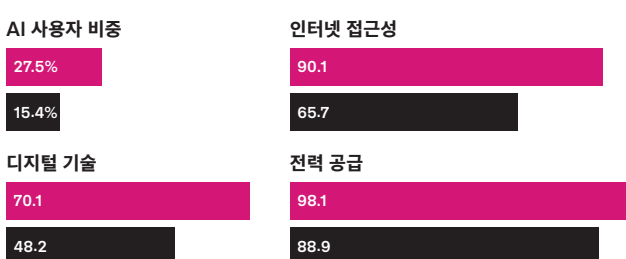
글로벌 지역별 AI 사용률

■ 글로벌 노스 ■ 글로벌 사우스



2026년 1분기 세부 격차

■ 글로벌 노스 ■ 글로벌 사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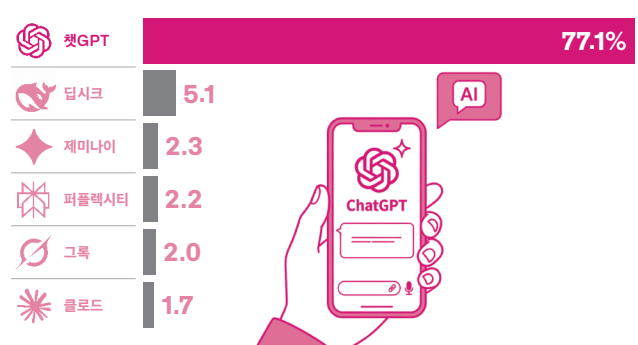


자료: 마이크로소프트, 2026.5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생성형 AI를 쓸까?

생성형 AI 활용률(2025년 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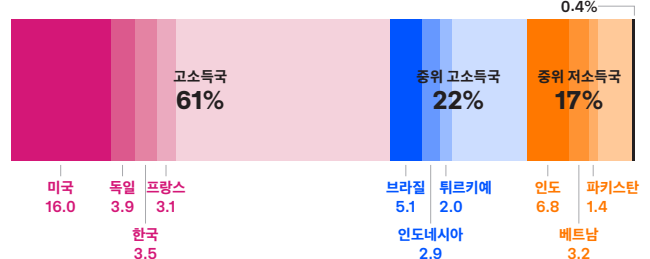
국가별 챗GPT 트래픽 순(2025년 4월 기준)

● 고소득국
● 중위 고소득국
● 중위 저소득국



국가별 챗GPT 트래픽 증가율(2024년 4월~2025년 4월)

저소득국 0.4%



자료: 세계은행, 2025.10

한국의 AI 활용과 생산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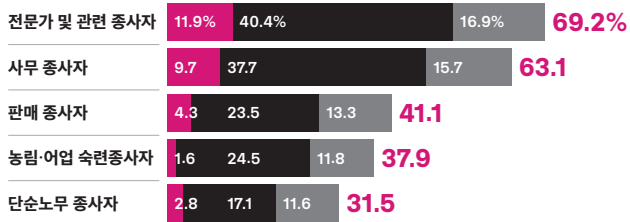
한미 AI 활용률

■ 한국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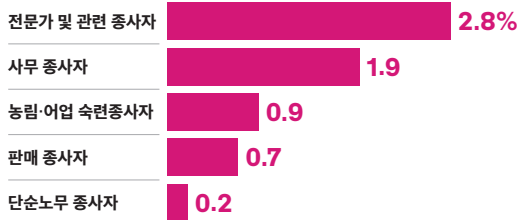


국내 주요 직업별 AI 활용률

■ 매일 사용 ■ 지난주 1일 이상 사용 ■ 지난주 미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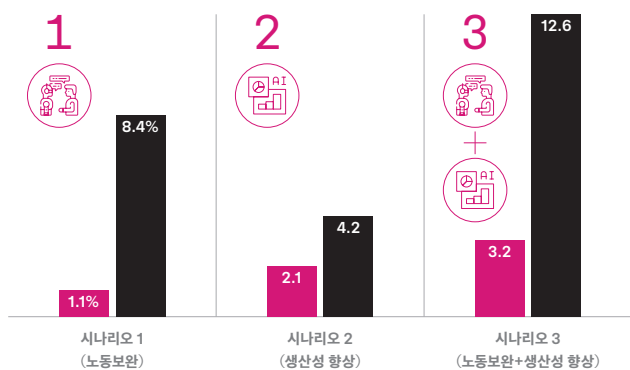


AI 도입에 따른 직업별 업무시간 감소율



AI 도입이 생산성 및 GDP에 미치는 영향

■ 총요소생산성 ■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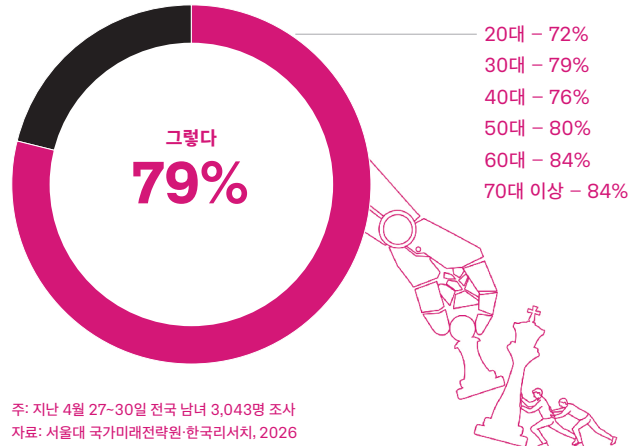


주: 시나리오 1(AI의 노동대체+노동보완), 시나리오 2(AI의 노동대체+생산성 향상), 시나리오 3(AI의 노동대체+노동보완+생산성 향상)

자료: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2025-2, 2025-22

AI는 어떤 격차를 불러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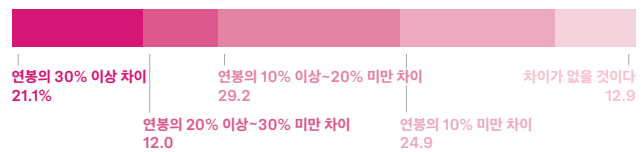
AI 활용 능력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까요?



생성 AI 등장 이후 업무 방식, 필요 역량, 업무량은?



향후 3년 내 AI 활용 능력에 따라 직장인 간 연봉 격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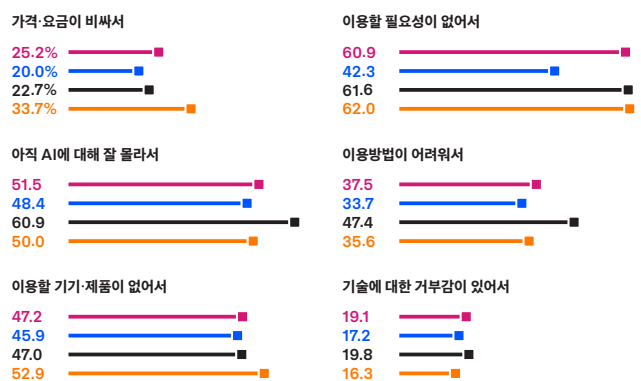


자료: 중앙일보, 2026

AI서비스 경험률



AI서비스 비경험 이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6.3

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장애인의 AI 격차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조금 늦게 배우는 문제'가 아닌 이유



김경식
칼럼니스트
bioman92@naver.com

최근 AI는 검색, 학습, 업무, 복지, 의료, 행정서비스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글을 쓰고 정보를 요약하고 번역과 상담을 지원하며 개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의사소통, 노동, 교육, 사회참여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사회 기반이 되고 있다.

AI 격차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사회참여권 제한하는 장벽... 새로운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핵심 역량은 AI 리터러시

그러나 기술 발전이 곧 모두의 기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장애인은 AI 시대에 가장 큰 격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3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84.3%)은 일반 국민(100%)보다 낮고, 특히 AI 등 심화 디지털 기술 활용에서는 일반 국민(84.9%)보다 약 20%포인트 낮은 65.1%로 그 격차가 두드러진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AI 리터러시 교육체계가 여전히 부족하고, 국내 장애인 디지털 교육 또한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기초 컴퓨터 활용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조금 늦게 배우는 문제'가 아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보를 빠르게 얻고 문서를 작성하며 학습 및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반면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육·고용·복지 서비스 이용과 사회참여 전반에서 점차 뒤처질 수 있다. 장애인에게 AI 격차는 정보 격차를 넘어 구조적 배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 PC와 인터넷 보급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를 경험했다. 당시 격차의 핵심은 컴퓨터 보유와 인터넷 접근 가능성의 문제였다. 정부는 PC 보급, 인터넷망 확충,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접근 격차를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AI 격차는 과거의 디지털 격차보다 훨씬 복잡하다. 과거에는 인터넷에 접속하고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AI가 만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며 AI의 편향과 오류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은 접근 가능한 AI서비스 부족, 장애 유형별 교육



지난 6월 5일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서 열린 '2026 장애인 AI드림챌린지' 행사 현장. ©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콘텐츠 부족, 보조공학 기기 등과 AI의 연계 미흡, 쉬운 언어 기반 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 AI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읽기 프로그램과 AI서비스가 제대로 호환되지 않으면 활용이 어렵고, 청각장애인은 음성 중심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프롬프트나 추상적 설명 중심의 교육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AI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포용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유엔의 교육·과학·문화 분야 전문가인 유네스코는 AI 리터러시가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AI 기술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 역시 AI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과 한계도 있으므로 적절한 교육과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미국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AI 기반 '개별화 교육계획(IEP)' 지원, 기기에 등록된 그림을 누르면 녹음된 음성이 출력되는 등 의사소통 보조기기(AAC)와 AI의 연계, 시선추적 기반 학습지원, 음성 인식 기술 등이 활용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장애인을 단순히 AI 기술의 수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할 뿐 아니라 AI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지, 어



**장애인 당사자가
AI 관련 정책과 교육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접근성은 비장애인이 대신
상상해서 만들 수 없다.**
**실제 생활에서 어떤 AI서비스가
불편한지, 어떤 교육 방식이
필요한지, 어떤 보조공학과
연계돼야 하는지는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서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떤 편향과 오류를 가질 수 있는지까지 가르치는 방향으로 교육이 확장되고 있다.

EU 역시 디지털 교육정책에서 포용성과 접근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교육 실행계획(DEAP 2021~2027)’은 고품질의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교육을 공동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체계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장애 학생에게 AI 기반 접근성 기술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AI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상 중심 사업과 기초교육 수준에 머무는 한국,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지역 AI 교육 거점 육성해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정보화 교육, AI 디지털배움터, 행복AI코딩스쿨 등 의미 있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일부 대상 중심의 사업에 머무르거나 기초 디지털 활용 교육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 성인 장애인, 중증장애인,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장애인 AI 리터러시 평생교육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는 못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AI 교육은 몇 가지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첫째, 장애인 AI 리터러시 국가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기기 사용이 아니라 생성형 AI 활용, 프롬프트 작성, 정보 검증,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AI 윤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둘째,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은 화면

읽기 프로그램과 생성형 AI를 연계한 교육, 청각장애인은 문자 기반 AI 활용 교육, 발달장애인은 쉬운 언어와 그림 자료를 활용한 교육, 지체·뇌병변장애인은 음성인식과 보조공학을 결합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특수교육기관을 지역 AI 교육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AI 교육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성인 장애인, 중증장애인, 고령 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과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AI 관련 정책과 교육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접근성은 비장애인이 대신 상상해서 만들 수 없다. 실제 생활에서 어떤 AI서비스가 불편한지, 어떤 교육 방식이 필요한지, 어떤 보조공학과 연계돼야 하는지는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서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AI는 장애인의 삶을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나 접근성과 교육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AI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에게 AI 리터러시는 단순한 컴퓨터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디지털 시민권 교육이고, 자기결정권 교육이며, 노동권과 사회참여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다. 장애인이 AI 기술의 수혜자를 넘어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하며 비판할 수 있는 주체가 될 때 AI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다. 

AI 양극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kjchoi@gachon.ac.kr

AI 양극화 해소는 결국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명시하는 작업이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법제 정비, 지자체는 지역 격차에 맞는 접근 거점과 프로그램 운영을,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초래하는 격차에 대한 자기 점검을, 시민사회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말아야 한다.

AI는 이제 특정 산업이나 전문가의 도구가 아니라 학습하고 일하고 소비하고 판단하는 우리 일상의 모든 국면에 침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침투 속도만큼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AI 양극화다. 단순한 개인 간 AI 격차의 총합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두 세계로 갈라놓는 힘으로 작동하려 한다.

AI 양극화는 개인 간 격차의 합 아니라 사회 구조 갈라놓는 힘...

성적·소득·자산 격차로, 다음 세대의 출발선으로 대물림
우선, 시장의 양극화다. 방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이 AI 생태계의 표준을 장악하고, 그 위에서 서비스와 이윤이 재편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도구 사용료조차 부담스러운 반면, 일부 기업은 AI로 생산성을 몇 배씩 끌어올린다. 승자 독식의 속도가 그 어느 산업혁명 때보다 빠르다.

다음은 세대 간 양극화다. 태어날 때부터 AI와 대화하며 자란 세대와 스마트폰 앱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세대가 같은 사회에서 살아간다. 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 정보 접근, 행정서비스, 의료 예약, 금융 거래 등 삶의 필수 영역에서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접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양극화도 문제다. AI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학습·업무·창작에서 시간을 벌여 더 나은 기회를 축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시간을 들여도 뒤처진다. 이 격차가 성적으로, 소득으로, 자산으로, 결국 다음 세대의 출발선으로 대물림된다. 이러한 양극화는 원칙을 선언한다고 줄어

들지 않는다.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책임 주체를 명시할 때 비로소 좁혀진다. 그 실행 조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려 한다.

첫 번째는 기울어진 출발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AI 양극화의 뿌리는 어릴 때부터 자란다. 유료 AI 튜터를 쓰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차이는 한두 학기가 아니라 10년 뒤의 진학과 취업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곳은 교육 현장의 AI 인프라다. 초·중고 학생 전원에게 검증된 교육용 AI 계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습권을 구성하는 필수재로 AI 도구를 재정의할 시점이 왔다. 여기에 공공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을 AI 학습 거점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다만 접근성 확대와 함께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AI 과몰입과 과의존의 예방이다. AI가 손쉽게 답을 내주는 만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힘이 위축될 위험이 상존한다. 접근을 넓히는 정책과 절제 있게 활용하도록 돕는 정책이 한 쌍으로 설계돼야 한다.

계층·세대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및 성·고령층 정책도 시급하다. AI 취약계층, 자영업자와 경력단절 여성, 중·고령 노동자를 위한 AI 실습 배우처는 강의에 그치지 않고 자기 업무에 실제 적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령층에게는 행정·의료·금융 등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AI 창구와 인간이 운영하는 창구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기술의 진보가 특정 세대를 시민의 자격에서 밀어 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자본과 데이터의 비대칭을 완화하는 것이다. 시장 양극화의 근원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본의 비대칭이다. 대기업은 자체 데이터센터와 전용 모델을 운용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API 사용료조차 부담스러워한다. 이 비대칭을 방치한 채 ‘모두 AI를 쓰라’고 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해법은 공공 AI 인프라 구축에 있다. 정부가 국가 AI데이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연구자에게 컴퓨팅 자원을 현실성 있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공 부문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기술적·법적 장치를 함께 갖춰야 한다. 데이터가 소수 기업에만 집중된 채로는 어떤 지원정책도 결국 자본의 격차를 뒤따라갈 뿐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AI 도입에 대한 세제 해

택과 도입 컨설팅,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재도전 지원책이 결합돼야 한다. 시행착오를 감내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면 결국 대기업만 남게 되고, 이는 국가경제의 다양성 자체를 위협한다.

**정부가 공공 AI 인프라 구축해 데이터 비대칭 완화하고
AI 판단으로 채용 탈락, 대출 거절 시 설명받을 권리 보장해야**

세 번째는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는 제도적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양극화의 가장 위험한 얼굴은 격차가 알고리즘의 결정으로 정당화되는 순간에 드러난다. 채용에서 탈락하고 대출이 거절되고 보험료가 오르고 복지 수급에서 배제될 때, 그것이 AI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사회에서는 격차가 곧 운명이 되고 만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자동화된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설명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사람이 재검토하도록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셋째, 고위험 영역의 AI 시스템은 사전·사후 영향 평가와 감사 기록을 보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AI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며, 규제와 혁신은 대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두 축이다.

지난 7월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바둑 AI 로봇 체험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위와 같은 세 측면을 관통하는 원칙은 책임 주체의 명확화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AI 양극화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에 맡겨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격차가 저절로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인쇄술도, 산업혁명도, 인터넷도 그러했다. 제도가 개입하지 않은 자리에서 격차는 언제나 확대됐고, 시장·세대·계층의 양극화로 굳어졌다. 따라서 AI 양극화 해소는 결국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명시하는 작업이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법적 정비, 지자체는 지역 격차에 맞는 접근 거점과 프로그램 운영을,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초래하는 격차에 대한 자기 점검을, 시민사회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맡아야 한다.

특히 AI 기술은 초단기로 세대가 바뀌지만 정책은 3년, 5년 단위로 굳어지곤 한다. AI정책은 완성이 아니라 갱신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 AI가 열여가는 미래는 두 갈래다. 하나는 모두가 시간의 주권을 되찾고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가 AI를 부리고 다수가 AI와 경쟁하며 소진되는 사회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기술이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어떤 제도를 설계하고, 어떤 예산을 배정하며, 어떤 책임 구조를 세우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AI 양극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에 의해 줄어든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오직 설계와 실행뿐이다. ㉔

공장으로 들어간 AI... 2030년까지 제조업 대전환한다

제조AI 2030 전략

권순목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

soonmok@korea.kr

우리나라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연결된 촘촘한 가치사슬을 갖춰 AI를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제조 역량을 데이터와 AI 자산으로 바꾼다면 우리 제조업은 대체할 수 없는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호황인가 위기인가.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내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으며, 지난 6월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제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선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중국과의 제조 경쟁력 격차 축소, 잠재성장을 둔화 등으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라고 생각된다.

축적된 제조데이터, 숙련공의 암묵지는 우리만의 경쟁력...

제조데이터 관리,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 등 포괄적 전략 제시

글로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 인프라와 모델 개발에 압도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범용 AI 모델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와 같은 피지컬 AI, 공정 최적화, 공급망 관리 등 제조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도 빠르다. 중국 정부는 'AI+ 제조 특별 행동 계획'을 통해 고품질 제조데이터셋과 제조 범용모델을 구축하고 산업 AI 에이전트를 대규모로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더 빠르다. 샤오미는 벌써 24시간 불을 밝힐 필요가 없는 공장인 다크팩토리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AI 원천기술과 컴퓨팅 인프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제조업에 적용될 AI 응용기술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제조AI는 AI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의 특성과 장비의 작동 원리, 소재의 변화, 품질 기준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화학 등 제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연결된 촘촘한 가치사슬을 갖춰 AI를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제조 현장에 축적된 데이터와 숙련공의 암묵지는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경쟁력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제조 역량을 데이터와 AI 자산으로 바꾼다면 우리 제조업은 대체할 수 없는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제조기업, AI 기업, 연구기관, 학교 등 1,500개의 경제주체들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AI 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제조업의 신속한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기업이 AI 기업과 함께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모으고, AI로 공장 제어부터 경영, 공급망, 제품까지 혁신하며, 학교와 연구소는 최신 AI 기술을 공급하는 큰 그림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산업통상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 23명과 함께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제조AI 2030 전략'을 마련해 2030년까지의 제조업 AX,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조AI 2030 전략'은 국가 차원의 제조데이터 수집·관리부터 제조업에 특화된 AI 두뇌(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 지역 확산, 생태계 조성까지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 6월 25일 HD현대일렉트릭 충주 배전캠퍼스 중저압차단기 공장 물류창고에서 여러 물류서들이 완제품을 운반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먼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품질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업종별 숙련공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춘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축적한다. 제조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업의 자산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과 연구자들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조데이터 금고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제조AI 두뇌를 개발해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정부는 특정 업종에 속한 기업 모두가 활용 가능한 ‘업종 특화 AI 모델’과, 제조업 전반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조AI 모델은 에이전트, 로봇, OS 등과 결합해 제품과 공장을 설계하고 시제품을 검증하며 생산·품질·물류를 자율적으로 최적화하는 ‘폴스택 AI 팩토리’로 구현된다. 폴스택 AI 팩토리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위험 공정을 대체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으며, 작업자는 반복적이고 위험한 업무에서 벗어나 공정관리와 의사결정 등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제조AI 기술을 전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제조기업에 확산하는 계획도 담았다. 제조기업이 밀집한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테스트베드와 종합지원센터, 엣지컴퓨팅센터, 통신망 등 공용 인프라를 제공한다. 산단별 선도공장의 성공사례를 협력기업과 유사 업종으로 확산하고, 대기업의 경험과 방법을 중소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지역과 공급망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한다. 제조AI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산업단지와 거점대학으로 확산된다면 지역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의 지역 일자리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 이렇듯 M.AX는 산업정책이면서 지역경제 정책이고, 인력·고용정

책이기도 한 것이다.

지역 산단 중심으로 클러스터 조성해 생태계 전체에 혁신 확산… 국민성장펀드 활용해 M.AX 추진기업 육성

기업이 M.AX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투자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와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제조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과 기업의 M.AX를 촉진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재정이 빈약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장벽에 부딪혀 낙오되지 않도록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금융 지원계획도 세웠다. AI, 로봇, 미래차, 방산, 반도체, 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약 16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국민성장펀드도 M.AX 추진기업 육성에 힘을 보탠다.

전략의 성패는 계획의 크기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렸다. 제조업은 업종과 공정마다 문제점과 데이터의 형태가 다르고, 실제 공장에서는 작은 오류도 생산 중단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실에서 성능이 우수한 AI가 현장에서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므로 충분한 현장검증과 실증, 실패를 보완하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본과 기술에도 사람과 현장의 힘으로 제조 강국에 올라섰다. 이제는 제조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바꾸고, 데이터를 AI 모델로 발전시키며, 모델을 공장과 지역 산업단지, 해외시장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M.AX는 대한민국이 잘해 온 제조업의 성공 방식을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전환이다. 방향은 정해졌다.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등 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한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㉔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연 3조6천억 원 투입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jmryu@korea.kr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날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추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일찍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를 도입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의사의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투입되는 자원의 양, 의료사고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화한 것으로, 개별 의료행위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정부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맞춰 3차례의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단행하는 등 의료행위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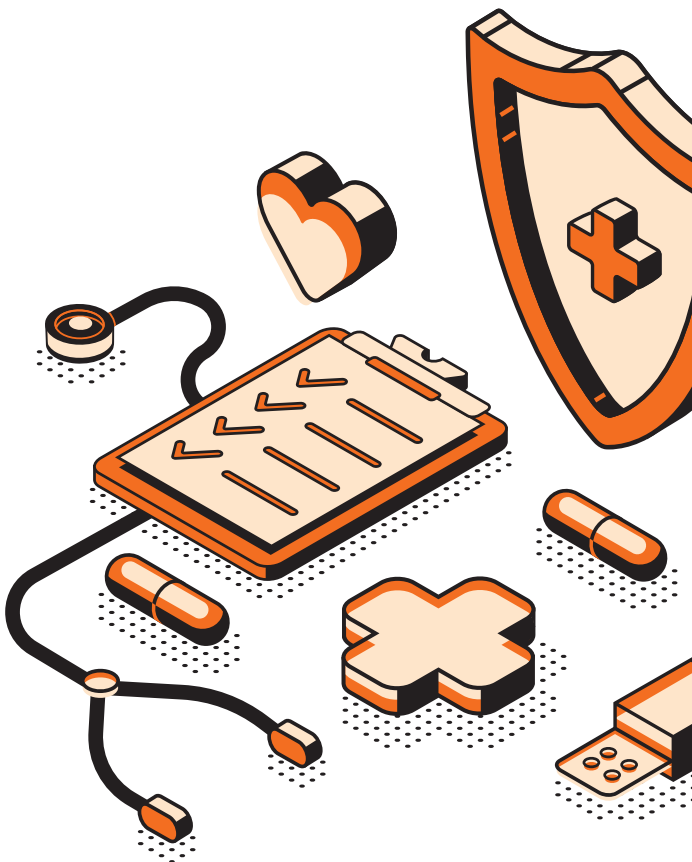
그럼에도 현행 건강보험 수가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빈도를 쉽게 늘릴 수 있는 검사 영역은 과보상되고, 진찰·입원을 비롯해 중증·응급 등의 필수진료 영역은 저보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진찰보다는 검사에 치중한 의료 공급과 짧은 진료를 초래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의료기관별 기능과 소재지, 환자의 상태나 진료 간 대기비용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의료행위에 같은 수가가 적용돼 지역의료를 약화하고 필수의료 역량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 우대 수가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진찰료 5% 가산... '3분 진료' 개선 위해 심층진찰 수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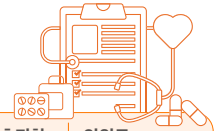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전격 추진해 2001년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조6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자 한다. 의료 현장에서 과다한 검사는 줄고 지역·필수 의료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지역·필수 의료 부문의 보상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등 균형 수가 전환을 모색한다.

먼저, 지역의 의료비용과 진료량 차이를 고려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 우대 수가 신설에 연 4천억 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중 지역 의사 의무복무 지역 6개 진료권(경기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 서북권, 중부권)과 비수도권의 종합병원 이상에서 수술·처치를 시행할 경우 10%를 가산 적용해 지역 내에서의 응급 대응과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구)에는 입원료와 진찰료를 5%씩 가산해 거주지 중심의 의료 안전망을 탄탄히 다질 방침이다.

둘째, 검사 중심의 의료 공급이 필수적인 기초 진료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외래 진찰과 입원 진료에 연 1조5천억 원을 보상한다. 동네 의원의 초진 진찰료를 6% 높이는 등 20년 만에 진찰료를 대폭 인상한다. 충분한 진찰과 상담에는 일반 진찰료보다 더 높은 심층 진찰과 상담 수가를 적용해 3분 만에 끝나는 진료가 아닌 10~15분 이상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기본 입원료도 10년 만에 올리고 간호인력 투입이 많은 입원 병동에 더 높



<그림> 달라지는 주요 수가 혁신



1. 지역에서 필수진료 시 추가 보상 연 4천억 원	비수도권, 경기·인천 취약지 - 모든 수술·처치 10% 가산 야간·휴일·응급 시 10% 추가 - 고위험 분만 100% 가산	인구감소지역 - 진찰·입원료 5% 가산	2.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 보상 강화 연 1조5천억 원	의원 초진 진찰료 1만8,840원 → 1만9,980원	충분한 심층진찰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확대 - 소아과 → 내과, 산부인과 등 확대	입원료 - 일반병실 → 7% 상향 - 중환자실 → 10% 상향	
3. 중증·응급환자의 수술 보상 수준 대폭 확대 연 9천억 원	중증 수술·시술 1,600여 개 20% 상향	응급·야간·휴일 수술 최대 5.5배 가산	전신마취 50% 인상	4. 임신부터 분만, 신생아 진료까지 출산 전 과정 지원 연 1천억 원	고위험 임신부 집중관리료 3만5천 원 → 7만 원	28주 미만 조산아 분만 최대 506만 원 가산 (비수도권·중증)	신생아 중환자 입원 일당 최대 144만 원 가산 (비수도권)
5. 걱정 없는 어린이 진료환경 조성 연 2천억 원	소아 진찰 가산 연령 확대 6세 미만 → 8세 미만	중증 소아 수술·시술 50% 추가 가산	소아 중환자실 처치 50% 가산 신설	6. 중증치료 후 회복·재활까지 이어지도록 보상 연 5천억 원	중환자실 조기 재활치료 도입, 빠른 회복 지원	어린이 집중재활 연령 확대 6세 미만 → 9세 미만	
7.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CT·MRI 검사 과다지출 감소 연 2조6천억 원	비용 대비 수익비 (진료비) 9조5천억 원 검체검사 평균 190% (6조7천억 원) CT·MRI 평균 204% (2조8천억 원) 현행 2조6천억 원 ↓ 150% 110% 1단계 2026년 2단계 2028년			- 2028년까지 균형 수가 조정 - 검체검사 진료비 28% ↓ CT·MRI 검사 진료비 25% ↓ -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CT·MRI 품질관리 통해 질 관리 강화			

은 보상이 돌아가게끔 가산체계를 개편해 질 좋은 입원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셋째,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생사의 기로에 선 중증·응급 환자가 적시에 고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종 치료에 연 9천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시행되는 1,600여 가지 고난도 중증 수술 및 시술 수가는 일괄 20% 인상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휴일·야간에 긴급하게 이뤄지는 응급 수술 보상은 최대 5.5배까지 확대된다. 또한 중증 수술 시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전신 마취와 고난도 특수 마취 수가가 최대 50% 인상해 병원의 최종 치료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휴일·야간 응급 수술 보상 최대 5.5배까지 확대하고 중환자실 입원 조산아 치료에 1일 최대 144만 원 보상 신설

넷째,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입원 치료, 소아 진료에 이르기까지 연 3천억 원을 투입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자·소아 의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임신·분만 수가는 20% 인상하며,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고위험 분만 가산 수가를 현행 66만 원에서 최대 396만 원까지 확대한다. 분만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조산아 치료에는 1일 최대 144만 원의 보상이 신설된다. 소아의 경우 진료 난이도를 고려해 진찰·입원 가산 연령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증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 시 보상을 강화(50% 가산)하는 한편 소아 중환자실에 입실한 8세 미만 환자 처치에 대한 보상도 마련(최대 100% 가산)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보상을 지속 추진하면서 급성기 중증 치료 후 회복기 진료로 연계하는 재활 의료 체계 마련에 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현행 중증 진료 중심의 상급중

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과 지역 내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본사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한편 질환 치료 후 조기 재활을 통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급성기 재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환자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기 재활 치료에도 별도의 성과 보상을 도입한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의 각종 지원은 국민이 어느 곳에 살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 최소화에 대한 고민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과보상된 것으로 확인된 검체검사 수가는 연 1조9천억 원을, CT·MRI 영상 수가는 연 7천억 원을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환경 변화와 실제 의료 원가 변동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 5~7년 단위로 이뤄졌던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2년 주기로 단축해 2028년까지 균형 수가를 조정해 나간다. 덧붙여 건강보험 제도 차원에서 과다 의료 이용 방지와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 의료 강화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했고,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수준을 인하여 본인 부담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이에 국민의 현재 의료 이용 수준을 가정할 때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차원에서 진료비 본인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 수가 개편은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혁신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지역·필수 의료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지역에서 신속히 응급 치료를 받고 병원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30억 상한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

jsmoon05@korea.kr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은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데 있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오히려
포상금을 지급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업들이 ‘누군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를
시도하지 않게 된다면, 신고포상금 제도는
사후보상이 아니라 사전예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흔히 담합을 두고 ‘피해자는 있지만 목격자는 없는 법 위반’이라고 한다.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하는 순간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되지만 그 합의는 회의실 안에서 이뤄진다. 입찰을 나누기로 약속하는 순간 경쟁은 사라지지만 외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쟁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회의록은 폐기되고 메신저 기록은 삭제된다. 결국 법 위반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조사관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거래 자체는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일 수 있기에 특정 계열사나 총수 일가를 지원하려는 의도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기술유행행위 역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보 격차 때문에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담합, 사익편취 등은 피해자는 있지만 목격자는 없는 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정보 비대칭 완화하고 시장 감시기능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이 커질수록 정부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은 내부고발과 신고제도를 시장 감시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조사 역량에 민간의 감시기능이 더해질 때 시장은 훨씬 촘촘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정보가 한쪽에만 집중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이 매우 큰 영역이다. 정부는 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 내부자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위반이 이뤄졌는지 잘 알고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 장치다. 기업 내부에만 머물러 있던 정보를 시장 감시기능으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단순히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민간이 가진 정보를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하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포상금은 사후적발뿐 아니라 사전예방이라는 측면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사건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도 그 의미가 크다. 경제학에서는 법 위반으로 얻는 기대이익보다 적발될 가능성과 제재에 따른 기대비용이 커질수록 위법행위가 감소한다고 본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을 시 언제든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기업 내부에 자리잡게 된다면, 이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를 시도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고발은 신분 노출이나 조직 내 불이익 등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라 하더라도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포상금 산정방식도 과징금 구간마다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구조여서 실제 지급 규모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 신고자가 감수하는 위험과 보상 사이에 간극이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과징금 구간별로 복잡하게 계산하던 지급기본액을 과징금의 10%로 단순화하고 지급 한도도 폐지했다.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대규모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했다.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한 점도 중요한 변화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 근절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을 상향 근거 마련

포상금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지급방식도 함께 손봤다. 만약 공정위 처분 직후에 포상금 전액을 지급한다면, 이후 행정소송 등을 거

쳐 과징금이 변경됐을 때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최종 판결까지 수년을 기다린 뒤에야 포상금이 지급된다면 신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했다. 과징금이 최초로 국고에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종료되고 과징금이 최종 확정돼 국고납입이 완료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신중하게 재정을 집행하면서도 신고자의 기여와 부담 또한 충분히 고려한 균형 있는 지급체계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신고가 더욱 필요한 분야도 함께 보완했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의 인정 범위를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확대했고,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에 대한 포상률 상향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보완했다. 신고자의 조사협조 정도나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포상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신고는 적극 장려되되 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함께 높이려는 취지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은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데 있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오히려 포상금을 지급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업들이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를 시도하지 않게 된다면, 신고포상금 제도는 사후보상이 아니라 사전예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공정한 경쟁질서는 정부의 조사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시장 참여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함께할 때 시장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이 민간의 시장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의 준법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돼 우리 경제가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쟁 질서를 갖추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OECD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EU, 전기화 추진으로 기후 리더십 이어갈까?

EU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3%에 머물러 있다. EU 집행위는 전기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해소해 2040년 전기화율 46%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화 실행계획'을 발표했으며, 회원국에 기존 EU 법령을 충실히 이행해 청정에너지 설비를 신속히 확대하고 전기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요금 및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필자는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연간 에너지 비용 정산서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집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낮 동안 생산된 전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온수와 난방은 가스보일러에 의존하는 건물이라 연간 요금의 80%가 천연가스 사용료였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면 '지금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서 밤에 사용하면 좋을 텐데', '보일러가 전기보일러였다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청구서를 보니 아쉬움이 더 커졌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크게 오른 가스 요금이 부담스러운 차에 중동 지역의 불안한 뉴스가 들려올 때면 이 상황이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 걱정하게 된다.

'전기화'는 30년 에너지정책의 결과물...

실행계획 발표, 국제 이니셔티브 출범 등 적극 추진 중
최근 EU의 전기화 추진 행보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7월 17일 EU 집행위는 '전기화 실행계획(Electrification Action Plan)'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유럽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46%를 전기로 공급한다는 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 6월 26일에는 에너지 저장 설비 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회원국 정부, 금융기관, 국제기구),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저장 기업,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함께하는 유럽

지난해 2월 8일 라트비아 레체크네의 고압 변전소.
© 연합뉴스

최초의 삼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EU 집행위가 유럽의 에너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제시한 '유럽 전력망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6월 23일에는 런던 기후행동주간 중에 '전기화, 지금(Electrify Now)'이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출범에 앞장서는 등 전기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기화는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공동의장국인 호주와 튀르키예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 출범의 일환으로 발표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기화 속도를 높여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수요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2035년까지 35%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확대, 전력망 현대화와 에너지 저장 역량 강화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EU는 최근 발표한 전기화 계획과 법안, 국제 이니셔티브 등으로 국제적인 청정 전기화 연대를 구축하고 기후 리더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화는 유럽에서 갑자기 떠오른 정책이 아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에너지정책 진화의 결과물이다. 2000년대 초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교토의정서 이행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였다. 2001년 「재생에너지 전력 촉진 지침(Directive 2001/77/EC)」,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Renewable Energy Road Map)」, 2009년 「EU 재생에너지 지침(Directive 2009/28/EC, RED I)」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전력의 탈탄소화가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화석연료 대신 전기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전기화 방향은 EU 집행위가 2011년에 발표한 '에너지 로드맵 2050(Energy Roadmap 2050)'에서 제시됐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80~95%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의 다양한 탈탄소화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모든 시나리오에서 최종 에너지 수요 중 전력 비중이 36~39%로 증가해야 하고 특히 수송과 냉난방에서 전력 사용 증가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2015년 '에너지 연합 전략(A Framework Strategy for a Resilient Energy Union with a Forward-Looking Climate Change Policy)'과 2016년 '청정에너지 패키지(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시장 개혁, 에너지 저장, 소비자 참여 등 전기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8년 '모두를 위한 청정한 지구 장기 전략(A Clean Planet for all)'과 2019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기후중립을 위해 청정 전력이 수송·건물·산업 부문에서 화석연료

를 대체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적정가격 에너지 접근성 확대하고 회원국 세제 혜택 제공 등 전환 비용 부담 완화할 예정

200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 분쟁 이후 EU는 에너지 공급 안보를 강조했지만 값싼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을 줄이지는 못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협을 크게 느낀 EU는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REPowerEU'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를 덜 쓰고(Save), 공급원을 분산하고(Diversify), 청정에너지 전환을 더 촉진하기(Accelerate) 위한 목표와 조치를 제시했다. 2025년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워 높은 가스가격과 전력가격, 화석연료 수입 의존으로 유럽의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적정가격 에너지 접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함께 발표한 '적정가격 에너지 실행계획(Affordable Energy Action Plan)'을 통해 산업계 전기화 가속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4월 'EU 에너지 긴급조치(Accelerate EU)'에서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체 생산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전력망 구축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EU는 그간의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노력으로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을 포함해 역내에서 생산한 청정 전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3%에 머물러 있다.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후 에너지 확보에 500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유럽 자체 생산 에너지를 늘리고 이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전기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해소해 2040년 전기화율 46%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화 실행계획'을 발표했으며, 회원국에 기존 EU 법령을 충실히 이행해 청정 에너지 설비를 신속히 확대하고 전기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요금 및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연말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조치도 제안할 계획이다.

전력망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양방향 충전(V2G; Vehicle-to-Grid) 등의 기술을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나 리빙랩(living lab)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저장에 관한 삼자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200GW의 에너지 저장 용량 확보를 추진한다.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전기차 확산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초기 비용이 전환의 장벽이 되지 않게 회원국이 세제 혜택이나 사회적 리스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U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 브라질, 호주, 튀르키예, 에티오피아, 캐나다, 필리핀, 영국,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그리고

기업 및 금융기관과 함께 지난 6월 출범시킨 글로벌 이니셔티브 '전기화, 지금'을 통해 전기화를 글로벌 의제로 확산하려 한다. '전기화, 지금'은 기술·정책 공유와 투자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전기화와 청정기술시장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 에너지 소비 전기화 정책으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이 전기화에 기여하는 경제구조 조성

EU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를 위해 시작한 에너지 전환은 이제 전기화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진화했다. EU 집행위는 전기화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전기화 속도를 올려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화석연료 수입을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기후변화 대응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을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서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전기화에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와 참여 동기가 다양해졌다. 기후환경 정책 관계자만이 아닌 에너지 다소비 산업, 청정에너지 생산자, 전력망 운영자, 금융투자기관, 자동차와 냉난방 설비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까지 모두 전기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실제 전환에 참여하는 주체다. 이들이 전기화에 동참하는 이유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러시아산 가스를 비롯한 수입 화석연료의 공급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거나 청정에너지 기술의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전기화를 추진할 것이다. 각자 추구하는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전기화라는 전략 아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기화 실행계획이 전기화의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결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투자, 에너지 저장,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됐다. 이를 추진하는 정치적 동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2026년 EU의 에너지 전환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화, 지금'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정책 연대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위기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전기화를 구심점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유럽의 연대와 글로벌 협력이 실제 정책과 투자, 시장의 변화로 이어져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



신인규

주벨기에EU대사관 겸 주NATO대표부 환경관
ikshin@korea.kr

지난 6월 9일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페더스도르프의 농경지에서
풍력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대만 타이베이 증권거래소의 가운지수(TAIEX) 전광판(왼쪽 사진)과 지난 7월 16일 서울 증권 하나은행 밀림동 현황판. © 연합뉴스

파운드리的大만, 메모리 추격자 중국, 그 사이의 한국

지난해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 삼성전자(약 7%)와의 격차가 60%포인트 넘게 벌어져 있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압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당분간 그 경쟁우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었다. 파운드리(대만)와 메모리(한국)는 경쟁의 측면도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AI 공급망을 함께 지탱하는 상호보완적 구조의 측면도 상당하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2026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 홍콩 소재 르네상스 하버뷰 호텔에서 주홍콩총영사관 주최로 ‘한국경제 콘퍼런스: 글로벌 IB가 보는 하반기 한국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 행사가 개최됐다. HSBC, 크레디 아그리콜, 골드만삭스, JP 모건, 씨티, 노무라 등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참석해 한국의 하반기 거시경제 흐름과 자본시장 전망,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의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경쟁·보완 구도 속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채텀하우스를 적용해 발언자는 공개하지 않고 주요 글로벌 IB가 보는 한국경제 현황 평가와 향후 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한국경제, 반도체 호황 속 ‘K자형 성장’ 전망… AI 수요 확대 등으로 2016년 이후 삼성전자 우위 뒤집혀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한 글로벌 IB 6개사의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범위는 2.4~3.7% 사이였고, 시장에서 별도 집계한 지난 6월 말 기준 주요 IB 8개 기관의 평균치는 3.0%였다. 이는 2025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1.0%) 대비 대폭 상승한 기댓값으로, 전문가들은 반도체·ICT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9.4% 증가했고(총수출 증가율 53.2%), 6월 반도체 수출은 199.5% 증가하며(총수출 증가율 70.9%) 매달 역대 최고 수출액과 증가율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반도체 공급 방식을 기존의 1년 단위 단기 계약에서 3~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전통적인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크

<표> 주요 글로벌 IB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HSBC	크레디 아그리콜	씨티	노무라	JP모건	골드만삭스	IB 평균
2026년	2.8%	2.6%	3.5%	2.4%	3.7%	2.7%	3.0%
2027년	2.0%	2.1%	3.0%	2.1%	2.7%	2.3%	2.3%

주: 올 6월 말 기준 전망치이며, IB 평균은 8개 IB(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의 평균치.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게 완화돼 적어도 2027년까지는 안정적인 고마진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글로벌 IB 참석자들은 이 호황이 반도체·ICT 섹터에 편중된 ‘K자형 성장’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약 70%가 해외 장비 수입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국내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 역시 실제 소비로 전환되는 비율이 2% 남짓에 그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등 전체 경제인구의 상당 부분은 이 호황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이러한 이중 성장 구조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AI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양극화가 관찰되며,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는 재정이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 성장의 온기를 주변 섹터로 확산시키는 적극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콘퍼런스의 중요한 주제 발표 중 하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산업 비교’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중심의 수직 통합형 순수 제조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대만은 TSMC를 주축으로 다수 업체가 분업하는 수평 통합형 파운드리 기반의 서비스업에 가까운 제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5년까지는 스마트폰·PC·D램 수요를 선점한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쟁력에서 글로벌시장의 우위를 지켰으나 2016년 이후 엔비디아 GPU, AI 사이클 등 AI 수요 확대의 수혜가 TSMC 중심의 공급망으로 집중되며 구조적 우위가 역전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런 흐름은 국제분석기관의 전망과도 연결되는데,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지난해 한국을 추월한 대만의 1인당 GDP가 더 빠르게 상승해 2031년에는 한국·대만 간 1인당 GDP 격차가 1만 달러 이상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 삼성전자(약 7%)와의 격차가 6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이는 대만 정부가 일찍이 반도체를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해 2023년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투자의 25%, 설비투자의 5%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반도체산업 지원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압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당분간 그 경쟁우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고대역폭메모리

(HBM)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계 공급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AI 시스템 내에서 메모리가 갖는 가치의 비중도 2027년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파운드리(대만)와 메모리(한국)는 경쟁의 측면도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AI 공급망을 함께 지탱하는 상호보완적 구조의 측면도 상당하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또한 한국과 대만 모두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으로 부가가치 기준 10%대 중후반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은 호황기-불황기 간 업계 실적의 진폭이 큰 편이고 대만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보인다는 차이점도 있었다. 한편 주요 8개 IB가 내놓은 올해 각국의 GDP 평균치치는 대만 10.1%, 한국 3.0%로 AI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도 면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국 반도체 굴기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제…

아시아 역내 AI 역량 평가에서 한국은 생산·활용 3위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한국 반도체산업에 ‘기회와 위기’의 이중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흐름 속에 한국·대만·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D램 등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의 지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진입 제한은 한국산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에서 반사이익을 가질 기회를 의미하며,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의 확대는 역설적으로 한국산 방위산업 품목의 동유럽, 중동 등지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이어져 부수적 기회를 주고 있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또한 예의주시해야 할 변수로 지적됐다. 최근 CXMT(D램), YMTC(낸드플래시) 등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산업은 ASML의 최첨단 EUV 장비 도입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일부 일본산 장비업체와의 협업 모색, 자체 리소그래피 장비 개발 등 자립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원가 구조상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의 약 3배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중국 업체들의 높은 마진율(보조금 포함 영업이익률 약 70%)이 대규모 재투자 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업계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관한 논의

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경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은 두 진영 사이에서 실리적 경제외교를 추구해 우호적 통상·투자 관계를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있었다. 이와 함께 어느 한 진영의 기술 생태계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대외 협상력이 크게 소실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아시아 역내 AI 생산 및 비즈니스 활용 역량 평가에서 중국과 한국의 선도적 위상이 부각됐다. 한국·중국·대만·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 이 평가에서 중국은 생산·활용 모두 2위로 글로벌 AI 생태계 '2강'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고, 한국은 생산·활용 모두 3위로 생산과 비즈니스 활용을 균형 있게 잘하는 국가로 평가되며 중국과 함께 아시아 최상위 그룹으로 평가됐다. 대만은 AI 인프라 생산(1위)에는 특화돼 있으나 비즈니스 활용 측면(5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선진화 긍정적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머니무브'는 구조적 변화 동반해야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그간의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3년 한시 운영, 법령 해석의 사안별 비밀관성 등은 외국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고,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국민연금(NPS)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됐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목표'가 아니라 외환시장 자유화, 공시 투명성, 결제 인프라 개선이라는 제도 개혁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올 7월 원화 외환시장 개방을 시작으로 2027년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 2028~2029년 MSCI 선진지수 최종 편입이라는 현실적 타임라인 시나리오를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한편 한국 증시에서 상장사의 이익 증가 속도만큼 주가에 프리미엄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도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대만 가관지수

(TAIEX)가 한국 코스피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2025년 4분기 이후 한국 증시가 이를 추격하는 흐름을 보이는 등 양 증시 간 성과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의견도 소개됐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오피스 공실률을 보이며 연간 약 40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 형성됐지만, 데이터센터 투자는 대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해외처럼 기관투자자 주도 구조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로 평가됐다. 해외 기관투자자의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보통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코로케이션(colocation; 데이터센터 공간과 전력·냉각 시설을 임대해 자사 서버를 운영하는 방식) 진입, 기관투자자와의 파트너십, 직접 토지 매입·개발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데, 한국은 아직 1~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력·냉각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핵심 병목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 구조가 주식, 채권 등 생산적 금융활동으로 전환되는 '머니무브'와 관련해 한국은 아직 이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주된 배경 중 하나로 한국 반도체 분야 핵심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금리가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아 주식 자산의 담보 가치가 구조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미국도 1998년에야 가계 주식 자산 비중이 부동산을 넘어섰다는 사례가 소개됐으며, 머니무브는 정책 한두 개로 단기에 달성하기 어렵고 기업·금융 시스템과 같은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수년 단위의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한국경제 콘퍼런스에서 나온 메시지를 종합하면, 한국경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리는 국가이면서도 대만이라는 파운드리 최강자, 중국이라는 메모리 추격자 사이에서 전략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만이 반도체를 안보 자산화해 국가 차원의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한국도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정책의 정교화, 추가 세수를 활용한 K자형 성장 격차 완화,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의 실리적 경제외교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하는 국면에서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 피지컬 AI 및 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육성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민관 협력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시아 반도체 삼국지의 행배가 걸린 지금이야말로 이 국가적 프로젝트의 실행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준석
주흥공통영사관 책임연구원
jspark15@korea.kr

지난 7월 8일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에 위치한 창업 지원 특화 플랫폼 '장장 하이테크 895 인큐베이터'의 반도체 테스트 시설에서 작업이 적임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AI 모델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잘 쓰는 나라’가 AI 강국

40년 전 대한민국은 IT 불모지였다. 오랜 연구 끝에 1986년 국내 기술로 만든 전전자교환기(TDX, 교환원 없이 다이얼이나 버튼을 인식해 상대방의 번호를 찾아 통화를 연결하는 전자 장치) 고유 모델을 상용화했지만 세계 최초는 아니었다. 해당 분야의 강국도 아니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한참 앞서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머지않아 디지털을 세계에서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됐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답안에 AI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이 들어 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내걸었다. 방향은 옳다. 다만 ‘3위’라는 목표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거대 모델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같은 공급 역량의 순위 경쟁이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또다시 미국과 중국을 뒤쫓는 추격자다. 추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추격만으로 1등이 되기는 어렵다.

TDX의 교훈, 최초 개발이 아닌 보급과 활용이 핵심... 은 국민이 AI를 제대로 쓰면 잠재성장을 달라질 것

발상을 바꿔보자. 우리가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다. 바로 AI 리터러시,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AI를 자기 일과 삶의 도구로 다루는 역량이다. 정부도 비전의 첫 번째 원칙으로 ‘모두를 위한,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내세웠다. ‘강국 3위’를 쫓기 전에 ‘AI 리터러시 1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필자는 그 답을 찾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1980년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으로 TDX 개발에 참여했다. 우리가 만든 교환기는 세계 최초가 아니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다음에 왔다. 국산 TDX가 전국에 깔리면서 만성적이던 전화 적체가 풀리고, ‘1가구 1전화’가 빠르게 현실이 된 것이다. 핵심은 ‘최초 개발’이 아니라 ‘전 국민 보급’이었다. 그렇게 깔린 인프라 위에서 대한민국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에 올랐고, 디지털을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됐다.

AI도 같은 길 위에 있다. AI 모델 1위가 아니라 그 모델을 가장 잘 쓰는 국민 1위인 나라가 진짜 강국이다. 전 국민 AI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시니어 AI 교육은 단순한 ‘사용법’
강의여서는 안 된다. 핵심은
개인 맞춤 프로젝트다. 평생 쌓은
현장 경험과 도메인 지식을
AI에 녹여내는 작업을 시니어
본인이 주도하게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던
암묵지가 AI 모델에 담기는 순간,
그 지식은 은퇴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사회의 자산으로 남는다.**

투자다. 한 사람이 AI를 쓰면 생산성이 오르고, 온 국민이 쓰면 잠재성장을 자체가 달라진다.

이는 추상적인 통찰이 아니다.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첫 대표 과제가 바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독파모’다. 2030년까지 우리 기술로 국산 AI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모델도 쓰일 곳이 없으면 또 하나의 ‘공급 1위’ 경쟁에 그친다. 전 국민의 AI 활용 생태계, 그중에서도 시니어와 대학이 독파모의 든든한 내수시장이자 시험 무대가 돼야 한다. 더구나 시니어가 평생 쌓은 현장 지식은 미중 AI 모델이 갖지 못한 한국 고유의 데이터다. 모델을 ‘만드는’ 강국 3위 전략과 모델을 ‘쓰는’ 리터러시 1위 전략은 그렇게 하나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 보급에서 가장 소외돼 있으면서도 가장 큰 잠재력을 품은 집단은 누구인가? 바로 시니어다. 대한민국은 2024년 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상당수가 여전히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경험을 살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할 뿐이다. 필자는 AI로 시니어 돌봄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그 잠재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

시니어 AI 교육은 단순한 ‘사용법’ 강의여서는 안 된



지난 6월 17일 광주 광산구 행복나루노인복지관에서 호남대 앵커 사업단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함께이음 AI 교실' 개강식. © 호남대

다. 핵심은 개인 맞춤 프로젝트다. 평생 쌓은 현장 경험과 도메인 지식(제조 노하우, 영업 감각, 행정 경험, 돌봄의 손길 등)을 AI에 녹여내는 작업을 시니어 본인이 주도하게 하는 것이다. 40년 경력의 숙련공은 자신의 판단 기준을 AI의 학습 데이터로, 평생 환자를 돌본 간호사는 돌봄 상담 AI의 검수자로 나설 수 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던 암묵지가 AI 모델에 담기는 순간, 그 지식은 은퇴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사회의 자산으로 남는다.

시니어를 '수혜자'에서 평생 쌓은 암묵지의 '생산자'로, 대학은 전 세대가 평생에 걸쳐 드나드는 열린 배움터로 이는 재정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복지 지출은 고령층이 소비의 대상으로만 머물 때 부담으로 쌓이지만, 그들이 생산의 주체로 돌아오면 성장과 세수의 기반으로 바뀐다. 초고령사회 재정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열쇠가 여기에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포용적 AI'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 전환을 담아낼 무대로 대학만 한 곳이 없다. 다만 그러려면 대학의 역할과 정의부터 다시 써야 한다. 청년들을 4년간 가르쳐 사회로 내보내던 기존 교육 시스템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한계에 부딪혔고, 지방대학은 빈 강의실과 텅 빈 기숙사를 떠안은 채 존립을 걱정한다.

이제 대학은 '청년만의 대학'에서 '모두를 위한 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입학과 졸업으로 닫힌 공간이 아니라 전 세대가 평생에 걸쳐 드나드는 열린 배움터로 그 정의를 넓히는 것이다. 정부가 '모두를 위한 AI'를 말한다면

그것을 현실에서 가장 잘 구현할 장소가 바로 '모두를 위한 대학'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시니어를 위한 학습·기숙 공간을 열고 AI 프로젝트를 매개로 청년과 시니어를 한 팀으로 묶어보자. 청년의 패기에 시니어의 경험이 더해지면 어느 한쪽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시너지가 생기고, 대학과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이 돈다. 대학은 공간과 교육을, 지자체는 정주 기반을, 기업은 과제와 일자리를 맡는 3자 협력이면 충분하다. 정부는 그 마중물만 놓으면 된다.

정부가 인프라와 산업에 쏟는 의지의 일부만이라도 '사람'에게, 그중에서도 변화가 가장 절실한 시니어에게 돌린다면 가장 빠르고 넓게 효과가 퍼질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AI 3대 강국이 목표라면 그 토대는 AI 리터러시 분야의 세계 1위이고, 그 1위는 화려한 모델 경쟁이 아니라 시니어와 청년이 '모두를 위한 대학'에서 함께 배우고 만드는 세대 융합의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40년 전 TDX의 보급이 그러했듯 승부는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널리 나누고 잘 쓰는가에 따라 갈린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가장 먼저 1등을 차지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사람답게 나아갈 길이다. ⁴⁸

박승훈

오마주 AI 대표,
재정경제부 인공지능자문관

사막에 부는 K뷰티 바람

한낮 기온이 섭씨 45도를 넘나들고 강렬한 자외선과 모래바람이 부는 아라비아반도. 이곳에 살다 보면 피부를 보호하는 건 미용을 넘어 생존의 문제임을 매일 실감하게 된다. 사막에 적응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신체를 가꾸는 행위는 혹독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랜 시간 축적돼 온 지혜에 가깝다.

사막에서 피부 미용은 생존이자 종교적·문화적 산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급증하며 새로운 부흥기 맞아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에서 미용의 역사는 이들의 국장(國章, emblem)에 새겨져 있는 대추야자와, 사막의 동반자인 낙타의 발자국을 따라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오롯이 살아남아 '생명의 나무'라 불리는 대추야자는 훌륭한 식량이기도 하지만, 그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은 뜨거운 태양에 찢긴 피부를 달래주는 천연 연고였다. 또한 강렬한 별에 그을린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비타민이 풍부한 낙타유를 바르고, 축복의 씨앗이라 불리는 블랙시드 오일과 유향으로 피부 장벽을 세우던 조상들의 모습은 이 땅의 오래된 '스킨케어' 역사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좋은 향을 풍기는 것은 신에 대한 경의이자 인간에 대한 예의로 인식됐기에 이러한 자연 치유 문화는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왔다. 2019년부터 유네스코(UNESCO)에서 대추야자와 낙타 등 사막 기후 속 전통 관습들을 연이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이를 "인간과 사막 환경 간의 지속 가능한 상호작용과 지혜"라 평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흔히 중동 여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짙은 눈화장, Kohl(코히) 메이크업 역시 화려함 속에 생존의 기능을 감추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베일 속에서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눈을 강조하는 미의식인 동시에 안구 감염을 막고 강렬한 사막의 햇빛으로부터 시력을 보호하는 기능적 방패였다. 즉 사우디의 뷰티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해 온 영리한 문화적 유전자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유구한 스킨케어 문화는 2016년 사우디 경제개혁 플랜 '비전 2030(Vision 2030)' 정책의 시행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17년 20%에서 2025년 34.5%로 급증하면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았다. 근현대 사우디 여성들의 화장은 일 년에 몇 번 없는 화려한 파티나 결혼식 등 철저히 사적인 공간을 위한 것으로, 풀메이크업 중심이었다. 두껍고 매트한 파운데이션과 강렬한 색조로 얼굴을 완벽하게 덮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서만 허락된 일종의 화려한 분장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커리어를 쌓기 위해 매일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지금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피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사회는 급격히 현대화됐지만 사막의 기후는 변하지 않았고, 직장인들은 45도에 육박하는 열기를 뚫고 출근한 회사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에어컨 바람을 맞는다. 과거처럼 척박한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온도 차와 건조함 속에서 하루 종일 무



너지지 않는 수분감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피부를 답답하게 가리는 대신 피부 자체의 건강함을 돌보는 일은 현대 사우디 여성들의 과제가 됐다.

이처럼 현대적인 필요로 재소한된 뿌리 깊은 스킨케어 문화는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역동성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가 생겼다. 아직 기성 세대만큼 구매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는 쇼핑몰 1층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보다는 내 피부에 대한 고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하고 영리하게 해결해 주는 '성분 중심의 대안'을 찾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대비 소셜미디어 시청 시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사우디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시선이 글로벌 OTT와 SNS를 휘몰아치고 있는 K컬처에 쏠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 모른다. K팝·K드라마 화면 너머로 접한 한국인의 맑고 건강한 피부톤은 이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문화적 관심사가 됐다. 단순 콘텐츠 소비를 넘어 그 속의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하려는 개방적인 소비 성향은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사우디 뷰티시장의 가장 역동적 트렌드는 K뷰티... 단발성 관계 아닌 함께할 'K파트너'로 거듭나야

사우디의 소비자들이 K뷰티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며 지갑을 열자 리야드 도심에 지탱하는 거대 리테일산업도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약국 체인이나 보수적인 대형 쇼핑몰 중심이던 사우디 뷰티 유통망은 이제 젊은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편집숍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현지 대형 뷰티 전문점인 '화이트스(Whites)'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형 약국 체인 '알다와(Al-Dawaa)'와 같은 바이어들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한국 브랜드 소싱에 공들이고 있는 모습은 시장의 대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필자는 최근 정부가 'K-뷰티 사우디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지 화장품 유통 기업 30여 개사를 직접 찾아가 만났다. 사우디 바이어들에게는 '얼마나 싸가'가 우선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이 무엇인지, 어떤 전략적 셀링 포인트가 있는지, 사우디의 '기후적 특성'에 얼마나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드넓은 사우디시장을 함께 공략할 'K파트너'를 찾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단발성 관계가 아니라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제조사가 현지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참여하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키워나가길 원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사우디 유통업자들이 입을 모아 인정했던 점 역시 K뷰티가 현재 사우디 뷰티시장의 가장 역동적인 트렌드라는 사실이었다. 과거 일부 마니아층의 전유물이나 신기한 유행으로 치부되던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은 이제 현지 최대 화장품 이커머스 플랫폼인 '나이스원(Niceone)'의 베스트셀러 상단을 차지하고, 리야드 도심의 주요 오프라인 뷰티 매대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 규모 있는 화장품 전문점이라면 하나씩 갖고 있는 온라인 자사몰에 들어가 보면 'K뷰티' 카테고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K컬처의 인기와 함께 한국 화장품이 가진 고품질 성분 중심의 진정성과 하이브리드형 혁신성이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고민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다.

소비자가 먼저 움직이며 기존 시장의 판도를 허물고 새로운 해답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비즈니스 신호는 없다. 사우디인들이 가진 뿌리 깊은 문화적·환경적 맥락을 이해하고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낸 틈새를 정교하게 파고들 수 있다면 사우디는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의 무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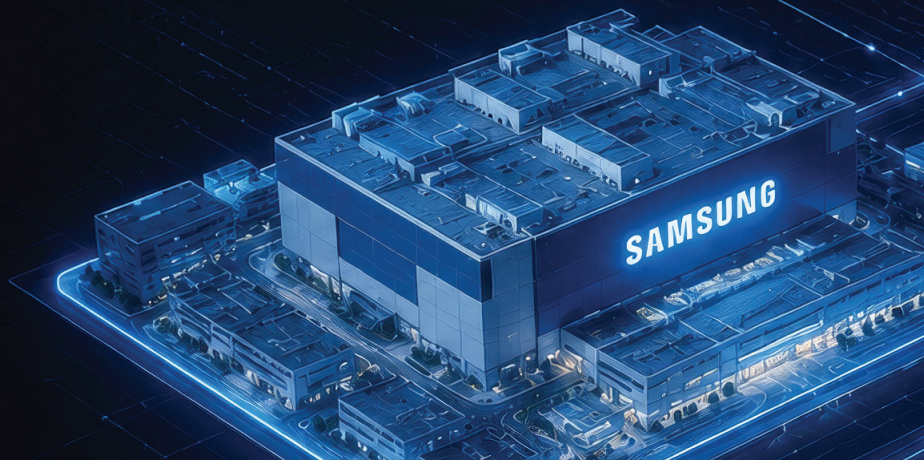
정동욱

KOTRA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 차장
donguk3@kotra.or.kr



4,755조 원의 베팅... 한국은 왜 하드웨어에 국운을 걸었나

SAMSUNG

MEMORY SEMICONDUCTOR
CLUSTER

지난 3월호에서 필자는 AI가 화면 밖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는 ‘피지컬 AI’를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그 흐름은 한 기업의 전략을 넘어 국가의 성장 전략이 됐다.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양옆에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다. 두 그룹이 국내에 쏟아붓겠다고 밝힌 금액은 합쳐서 4,755조 원. 삼성이 2,655조 원, SK가 2,100조 원을 투자하며, 여기에 GS·네이버 등의 투자를 더해 전체 규모가 약 5천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자릿수부터 낮은 이 숫자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한 해 정부 예산의 6배 넘는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등장

4,755조 원은 올해 정부 예산 약 728조 원의 6배가 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역사상 초유의 액수다. 미국이 추진 중인 초대형 AI 인프라 사업 ‘스타게이트’와 비교해도 여섯 배가 넘는 규모다. 일부 언론들은 이 투자가 이론상 700만 명에 이르는 고용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투자가 향하는 곳이 바로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센터다. 이 대통령은 이 세 가지를 두고 “초격차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표현했다. 화면 안에서 답하던 생성형 AI가 공장과 물류, 자동차 같은 현실 공간으로 뻗어 나가려면 그 바탕에 반도체라는 두뇌와 데이터센터라는 심장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발표가 끝난 뒤 두 회장에 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국가 영웅, 국민 영웅으로 불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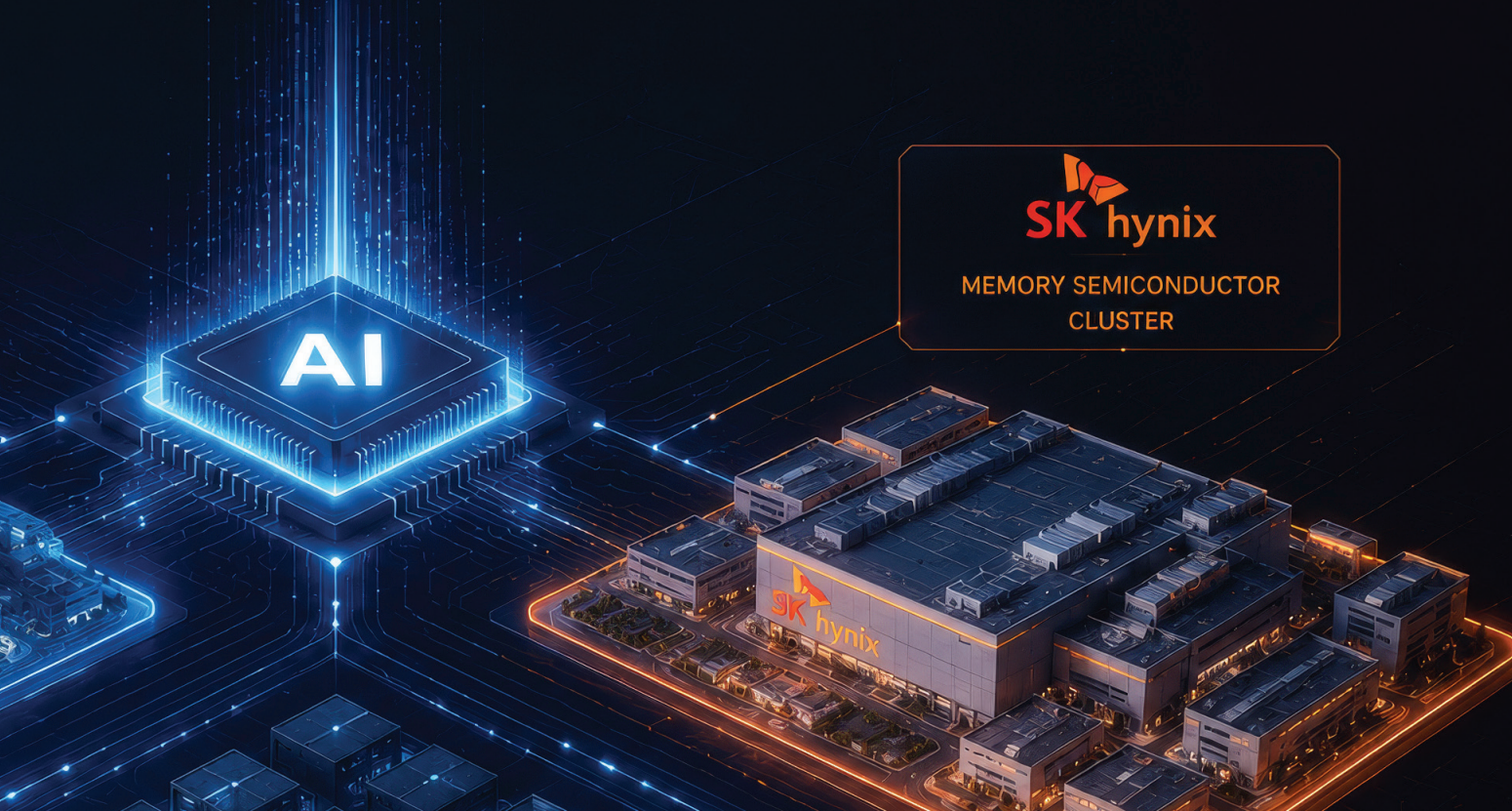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이 거대한 베팅의 방향이다. 그동안 글로벌 AI 경쟁의 주인공은 오픈AI,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다. 얼마나 똑똑한 챗봇을 만드느냐가 승부처였다. 그런데 한국이 국운을 건 곳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반도체·로봇·데이터센터라는 하드웨어와 인프라다.

이유가 있다. AI가 현실로 나올수록 승부의 영역이 ‘똑똑한 모델’에서 그 모델을 돌릴 ‘물리적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이를 학습시키고 구동할 반도체, 그 반도체를 모아둘 데이터센터, 그리고 그 지능을 현실에서 실행할 로봇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 셋을 하나로 묶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지컬 AI가 현장에서 모은 데이터를 데이터센터로 보내 다시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로봇산업의 승부는 하드웨어가 아닌 데이터에서 결정된다”는 시각이 이번엔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전략으로 확장된 셈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특징은 투자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서남·충청·영남권의 투자 규모만 약 1,600조 원에 달한다.

가장 큰 몫은 서남권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가량을 투자해 메모리반도체 공장(팹) 4기를 새로 짓는다. 그동안 한국의 반도체 생산은 경기 평택·용인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었기에, 서남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재용 회장은 후보지로 광주광역시를 직접 언급했다.

SK그룹은 반도체 생산 인프라 투자에 더해 전국 각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만 1천조 원을 배



MEMORY SEMICONDUCTOR
CLUSTER

정했다. 우선 5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0.5~1GW 단위로 나눠 구축하고, 이후 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AI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지능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환호 뒤에 남은 냉정한 질문 세 가지

역대급 청사진에 시장과 지역은 들썩였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냉정한 물음도 함께 던진다.

첫째는 전력 확보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돌아가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정부 추산으로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6.3GW, AI 데이터센터에 18.4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0기 안팎에 맞먹는 발전용량이다. 게다가 전력이 충분히 생산된다 하더라도 수요처까지 보낼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병목'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기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송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둘째는 공급과잉 우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D램 매출 점유율을 합산하면 약 70% 안팎에 이른다. 여기서 생산능력을 더 키웠다가 AI 수요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해지면, 오히려 메모리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발표 당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그날의 해외 증시·수급 요인 탓으로 분석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가 반도체주에 '양날의 검'이라는 시장의 경계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는 실행력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권마다 대기업들이 수백조 원씩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왔지만 실제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았다"며, "아직은 계획

단계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계획이 기존 투자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숫자의 크기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청사진을 현실로 바꾸는 힘

그럼에도 이번 발표가 던지는 방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AI 대항해시대, AI 신대륙을 선점하려는 미국과 중국 등의 국가 대항전"으로 규정했다. AI 경쟁이 컴퓨팅 인프라와 전력·인재까지 아우르는 국가 역량의 경쟁으로 옮겨왔다는 진단이다. 이 판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제조 역량과 탄탄한 제조 기반이라는,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카드를 쥐고 있다.

관건은 이 4,755조 원이라는 청사진을 실제 성과로 바꿔낼 수 있느냐다. 천문학적 숫자에 취하기보다 전력망과 용수를 제때 공급하고 인재를 길러내며 특정 분야에 쏠린 위험을 분산하는 일이 필요하다. 화려한 발표의 이면에서 이 '조용한 인프라'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신대륙을 향한 배는 이미 출항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항해를 끝까지 감당할 실력이다. [김덕진]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AI 2026 트렌드 & 활용백과』 저자
kimdukjin@itcl.kr

2천만 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면...

2026년 한국에서 출간된 문학 작품 가운데 메시지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은 미국의 SF 작가 킴 스탠리 로빈슨의 『미래부(The Ministry for the Future)』가 아닐까 한다. 2020년 미국에서 나오고 나서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등이 극찬했던 작품인데, 한국에서는 이제야 번역됐다.

기후위기를 소재로 한 이 소설의 시작은 충격적이다. (이미 현실에서는 과거가 된) 2025년의 어느 날, 인도 북부에 열파가 덮친다. 며칠간 이어진 열파로 인도 전체에서 2천만 명이 죽는다. 더위에 발전기가 고장나고 전기가 끊기자 냉기를 찾아서 호수로 뛰어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 체온(36.5도)보다 데워진 물속에서 하나둘 목숨을 잃는다. 시체로 가득 찬 호수.

소설 속 허구가 아니다. 올해 6월 유럽을 덮친 이른 더위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초과 사망자가 3천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덥지 않았던 평상시 6월 사망자 수와 비교했을 때 무려 3천 명의 희생자가 더 생겼다는 뜻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설처럼 더위 탓에 목숨을 잃었다.

알다시피 인간은 약 36.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살아남는 향온 동물이다. 이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땀을 흘린다. 피부의 땀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한다. 하지만 대기 중 습도가 너무 높아 땀을 증발하는 일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맞다. 몸의 열이 계속 쌓여 체온이 올라가고 심하면 생명을 잃는다. 소설 속 인도에서, 지난 6월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산화탄소의 역습, '속 빈 강정'이 된 식물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중위도에서 태어난 행운 덕분에 우리는 이 중요한 전 지구적 재앙 징후에 둔감하다. 사계절 기후 패턴이 바뀌는 조짐이 분명히 보이고 식탁이 바뀌고 있음에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도 분명히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테다. 기후위기는 알레르기 질환 유행을 부추긴다. 이런 식이다. 지구가 데워지면 북반구의 중위도는 덥고 습한 날이 많아진다. 덩달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내놓는 식물의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그 결과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비록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그래도 식물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일은 좋지 않을까?' 실제로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위기로 북반구 중위도 이상 지역에서 곡물의 수확량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가 심각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식물이 빨리 성장하기는 했다. 그런데 쌀과 밀 같은 곡물이나 과일의 상태는 영 시원찮았다. 곡물은 영양소가 부족했고, 과일의 속은 충분히 알차지 않았다. 전형적으로 식물이 웃자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

난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식물이 열매에 영양소를 꼭꼭 눌러서 저장하는 이유는 일종의 생존 본능이다.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식물은 후대를 기약하며 씨앗을 더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열매에 영양소를 저장한다. 그런데 지금의 지구 대기에는 식물이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만드는(광합성) 원료인 이산화탄소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하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넘치자 식물은 탄소를 흡수해 몸집은 불리게 됐지만 토양에서 흡수해야 할 미네랄과 단백질 같은 필수 영양소의 축적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됐다. 영양소가 이산화탄소에 의해 '희석'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가 바로 영양소가 부족하고 속이 알차지 않은 곡물이나 과일이다.

열파와 한파,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농사에 타격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도 먹을거리 생산량이 줄어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알레르기 질환부터 전 세계적 곡물 생산 변동까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도 매년 그 정도를 더해 가면서.

1950년대 이후 최악 엘니뇨, 한반도를 겨냥다

올해 상황도 심상치 않다. 하필이면 1950년대 이후 최악의 '엘니뇨(El Niño)'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태평양 중앙부와 남아메리카 페루 인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가량 지속될 때 선언된다.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애초 북반구의 적도(0도)와 30도 사이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분다. 태평양의 해수도 이 무역풍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적도의 따뜻한 햇빛에 데워진 바닷물(표층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태평양 동쪽에서는 심해에서 차가운 바닷물(심층수)이 그 자리를 메운다. 자연스러운 해수의 에너

지 순환이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 무역풍의 강도가 약해질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햇빛에 데워진 태평양 동쪽 바다에 쌓여 있던 따뜻한 바닷물의 이동에 제동이 걸린다. 따뜻한 표층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심해의 찬 바닷물이 올라올 수가 없다.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엘니뇨가 이때 나타난다.

일단 엘니뇨가 지속되면 남미의 페루 같은 곳은 따뜻해진 바다의 영향으로 폭우와 홍수가 발생한다. 찬물에 살던 물고기가 사라져 어업에도 타격을 입는다. 반대로 저위도 지역의 아시아는 가뭄과 폭염이 심해진다. 인도 역사에서 가뭄으로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는 공교롭게도 엘니뇨가 심할 때였다. 엘니뇨가 촉발한 전 지구적 식량난이 걱정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중위도에 있는 한국은 어떨까? 대체로 엘니뇨가 심할수록 한반도 남부 지역은 폭우가 심했다. 서태평양 중심부에서 비로 내려야 했을 뜨겁고 습한 수증기가 엘니뇨로 길을 잃고 일본 열도와 한반도 남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수증기가 덥고 습한 날씨에 더해 북쪽의 찬 공기와 부딪치며 폭우를 만든다. 엘니뇨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연구 중이다.

소설 『미래부』에서 며칠 새 2천만 명의 이웃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화를 참지 못한 일부는 극단적인 테러리스트가 돼 석유 재벌을 암살하고, 부자의 전용기를 포함한 항공기와 화물선을 공격한다. 2001년 9·11 테러부터 최근의 국제 분쟁까지 21세기 들어 벌어진 일들을 떠올리면, 충분히 현실이 될 법한 상상이다.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가 왠지 싸늘하다. ☹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imtyio@gmail.com

목적 없는 대화를 한다는 것



‘스몰 토크(small talk)’라는 말을 좋아한다.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작은 이야기’나 ‘소소한 이야기’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몰 토크라는 어감이 마음에 든다. ‘스몰’이라는 발음은 부드러운데 ‘토크’의 발음은 툭툭 튀어서 두 개의 단어 사이에 수많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스몰 토크에 대한 사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영국 서섹스대 심리학자인 샌드스트럼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던 교수가 진행한 바리스타 실험이다. 카페에 들어가서 바리스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사회의 관계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바리스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와 토론을 해본 적도 없고 나이도 이름도 모르지만,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최근의 기분을 얘기하고,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고 공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진다는 것이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많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맛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찬사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오늘 생선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방금 수산시장 다녀오신 거예요?”라든가 “전에도 맛있었지만, 오늘 유독 맛이 좋네요.”라는 말을 건넨다. 자주 가는 카페에서는 “이 커피 새로 들어온 건가요? 완전 새로운 맛이에요.”라고 말을 건넨다. 사장님들은 대부분 기분 좋게 내 말에 대꾸해 주거나 설명을 달아준다. 내가 칭찬받은 게 아닌데, 칭찬을 건넨 사람은 나인데, 기분이 좋아진다.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한국 생활과의 가장 큰 차이가 스몰 토크라고 한다. 영화를 봐도 그렇다. 편이나 바에 앉아서 옆에 앉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굳이 친해지려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수많은

파티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처음 만난 사람과 다섯 마디를 나누기 전에, 이름도 모른 채 헤어지는 일이 흔하다. 그때 주고받는 이야기들에는 별다른 목적이 없다. 그저 같은 장소에서 분위기를 함께 즐기는 것이다. 결혼했는지 묻지 않고, 출신 학교를 묻지도 않는다. “와, 오늘 입은 셔츠 멋지네요.”라든가 “좀 전에 나온 곡 너무 좋지 않았어요?”라든가 “이 화이트 와인 맛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같은 현재에 충실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우리는 대화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대화란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하고, 쓸모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고, 경제적이고 압축적이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 문화 속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저 흘러가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들면 삶이 피곤해진다.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풍경 속에서 상대방에게 말 걸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어떤 연구에서는 스몰 토크를 자주 할수록 사회적 자신감이 높아지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이라도 교육과정에 ‘스몰 토크’ 수업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주제가 적당한지, 어떻게 확장하고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김중혁 소설가

『펭귄뉴스』, 『가짜 팔로 하는 포옹』 작가
popsong7@gmail.com

절세가 곧 재테크다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매년 2월이면 남편은 같은 걸 묻는다. “왜 당신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데, 나는 더 내?” 그때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 몇 가지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는데, “올해는 나도 가입해야겠다”던 남편은 한 해를 그냥 넘기고 이듬해 같은 걸 또 묻곤 한다. 연말정산 시즌마다 ‘13번째 월급’ 대신 ‘13번째 세금’에 아쉬워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바쁜 연말 업무에 밀려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말고, 여름 휴가철에 절세 혜택을 미리 점검하고 재테크 전략을 세워보자.

연금계좌로 연말정산 환급받기

먼저 연말정산 ‘13번째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다. 연금저축(개인연금)은 연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IRP)까지 더하면 납입액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48만5천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118만8천 원을 덜 낸다. 세금을 100만 원 넘게 직접 깎아주니 파격적이다. IRP는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 ‘과세 이연’ 효과도 있다. 당장 낼 세금을 시드머니로 굴릴 수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수년 뒤에 과세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연말정산 대비를 마쳤다면, 재테크 수익을 지킬 방어막을 칠 차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다. 연간 2천만 원까지,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ISA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자유롭게 담아 투자할 수 있는데,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이자소득세(15.4%)보다 낮은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계좌 해지 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도 큰 장점이다.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이라면 ‘청년미래적금’ 같은 정책 상품도 놓치지 말자. 은행 이자에 정부 지원금 6%를 얹어주는 데다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기성 세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상품이다. 가입 신청이 7월에 마감됐지만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니 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을 추천한다.

여윌돈이 있는 투자자라면 국민참여성장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투자액 3천만 원까지 4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를 해준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펀드 첫 출시 후 닷새 만에 ‘완판’됐지만, 3분기 중 2차 출시 예정이라니 오픈런을 준비하자.

세후 수익이 진짜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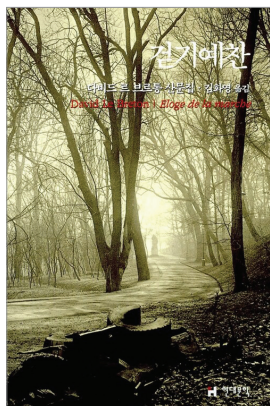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내년에 낼 양도소득세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12월의 수익에 취해 있다간 이듬해 5월에 생각보다 큰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시장 상황을 살피며 반등 기미가 없는 종목은 매도해 수익과 상계 처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 시장으로 돌려 운용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활용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의 입학 여부가 최종 결과이듯, 재테크 역시 스마트폰으로 캡처해 둔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을 다 떼고 내 주머니에 남은 ‘세후 수익’이 진짜 성적이다.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세금 새는 구멍을 막는 보수 공사를 꼭 해두길 권한다. 



이현 중앙일보 기자
『금융 프렌즈가 우릴 기다려』 저자
lee.hyun@joongang.co.kr

오늘도 세상의 알몸 속으로 뛰어들어 볼까



다비드 르 브르통,
『걷기 예찬』

동력이 모든 거리를 비약적으로 줄여놓았다. 비행기는 한 나절 만에 대륙을 건너고, 열차는 반나절이면 한 나라의 끝과 끝을 잇는다. 인류사에서 인간이 이토록 걷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시절이 무색하게 사람들은 주말마다 굳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멀고 높고 더딘 길을 제 발로 찾아 나선다. 더 빨리 갈 수 있게 됐는데, 어째서 도리어 느려지려 하는 걸까.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에 사람들은 왜 걸으려 할까?

다비드 르 브르통의 『걷기 예찬』은 그 물음을 정면으로 받는 책이다. 그는 걷는 일을 두고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라 말한다. 두 발로 걸으면 세상은 더 이상 구경



눈 위에 남은 것은 스키 자국이 아니라 걸음의 시간이었다.
산은 서두르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거리가 아니다. 흙의 단단함이 발바닥을 타고 오르고, 오르막의 무게가 종아리에 걸리고, 바람의 결이 뺨을 스친다. 르 브르통은 걷는 이를 일컬어 “자동차를 버리고 세상의 알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걷기란 거창한 일이 아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사소한 동작이야말로 인간이 제 존재를 곱씹는 가장 밑바닥의 철학이라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일하고, 차에 실려 집으로 가서, 다시 소파에 파묻히는 우리를 그는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부른다. 걷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자 우리는 걷는 법과 함께 제 몸을 느끼는 법마저 조금씩 잊어버렸다. 잃어버린 그 다리를 도로 찾는 일, 그게 걷기였다.

나는 오랜 시간 무동력으로 여행해 왔다. 자전거, 카

약, 그리고 스키까지. 동력의 신속함과 쾌적함을 마다한 건 대단한 신념 때문이 아니다. 느린 만큼 세상이 내 안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다. 무동력 여행은 여러 형태였지만, 그 바닥에는 언제나 걷기의 속도가 있었다. 빠를수록 세상은 제 몸을 숨기려 납작해진다. 시속 300km의 차창 밖에서 마을은 이름만 남기고 스쳐 지나간다. 속도는 거리를 줄여놓는 대신 세상을 지운다. 그러나 두 발의 속도에서는 무엇 하나 뭉개지지 않는다. 걷는 사람은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대신, 세상이 제 몸을 천천히 통과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니 두 발로 여행한 곳들을 떠올리면 몸이 먼저 기억을 들춘다.

티베트를 여행하며 현지인들과 함께 성지를 순례한 적이 있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가 세계의 중심으로 떠

받드는 카일라스산. 높이는 6,600m에 그치지만 아직 인간이 그 꼭대기를 밟은 적 없는 미답봉이다. 누구도 감히 신의 정수리를 디디지 않은 것이다. 대신 사람들은 그 둘레를 걷는다. 산을 한 바퀴 돌면 한평생의 업이 씻겨 나간다고 믿으면서 5천m가 넘는 고지대를 걷는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갈딱갈딱 넘어가는 곳인데, 더러는 한 걸음 마다 온몸을 땅바닥에 던지는 오체투지를 하며 나아간다. 걷는 일이 곧 기도가 되는 성스러운 길. 나는 숨이 끊어질 듯한 고산병에 시달리며 그 길을 걸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험벗은 고원에 부는 바람은 살을 에었고,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팠다. 한 발 떼는 데도 온몸의 숨을 다 끌어모아야 했다. 하지만 느려진 걸음 덕분에 카일라스는 제 둘레를 한 자락씩 천천히 펼쳐 보이며 내 안에 스며들었다.

빙하의 얼음, 화산의 잿더미, 밀림의 진창...

발바닥으로, 종아리로, 가쁜 숨으로 몸에 새기다

일본의 야쿠시마에서는 7천 년을 살았다는 삼나무 한 그루를 보기 위해 고박 열 시간을 걸었다. 그곳엔 휴대용 화장실 키트를 배낭에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몸에서 나온 것은 전부 도로 지고 내려와야 하는 숲. 사람이 다녀간 흔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은 7천 년을 버틴 나무 앞에서 갖춰야 할 마땅한 염치였다. 한 달에 35일 비가 내린다는 섬답게 걷는 내내 날씨가 오락가

락했다. 섬 전체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라 쏟아지는 비를 숲은 스스로 감당했다. 땅은 질척이지 않았고, 계곡물은 바닥의 자갈이 다 비치도록 맑았다. 숲에는 야쿠시마에만 산다는 원숭이와 사슴이 흔했다. 사람을 통 겁내지 않아 길 가운데 퍼질러 앉아 털을 고르다가 사람이 지나가도 흘끔 돌아볼 뿐이었다. 온통 이끼로 뒤덮인 숲을 더디게 걷는 동안 도시에서 굳을 대로 굳었던 마음 한구석도 천천히 풀려나갔다. 나무 앞에 서고서야 알았다. 차로 단숨에 달을 수 있었다면 그 나무는 그저 큰 고목에 지나지 않았으리라. 열 시간의 걸음은 7천 년의 시간을 몸으로 더듬는 데 치러야 할 입장료였다.

알프스에서는 눈 덮인 산맥을 일주일째 걸쳐 넘었다. 바닥에 특수한 천을 붙여 오르막도 오를 수 있는 산악스키를 신고서였다. 본디 스키란 눈 덮인 땅을 건너기 위한 옛사람들의 신발이었으니, 그 또한 걷기의 한 형태였다. 그 길에는 하루에 산장이 딱 하나뿐이었다. 날이 아무리 사나워도, 다리가 아무리 굳어도, 그날 목을 산장에는 거머잡아야 했다. 눈앞에 뻗어 보이는데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던 산장. 나를 그곳에 데려다주는 건 첨단 장비가 아니라 오직 두 다리였다. 걷는 동안에는 생각도 말도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사실만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 단순함이 좋았다. 걷는 일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했으니까.



사람을 통 겁내지 않는 원숭이들.
숲의 주인은 처음부터 그들이었다.

산장으로 데려다준 것은 지도도 기계도 아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 두 다리였다.





걸음이 느려질수록 산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대개 가장 느린 속도로 다가왔다.

그 밖에도 참 많이 걸었다. 사막의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지기도 했고, 빙하의 얼음을 아이젠으로 찍으며 건너기도 했다. 화산의 잿더미를 밟거나 밀림의 진창을 헤치기도 하며. 어떤 길은 한나절로 끝났고 어떤 길은 한 달이 걸렸다. 모든 길은 목적도 풍경도 저마다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걸으면 그 풍경이 발바닥으로, 종아리로, 가쁜 숨으로 내 몸에 새겨진다는 것. 그래서 걷고 나면 세상을 구경한 게 아니라 그곳을 한 번 살아낸 기분이 들었다. 동력 위에서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자리에서 두 발은 매번 무언가를 가져다주었다. 길센의 흙냄새, 발밑의 경사, 스쳐 간 사람의 눈인사를.

무용함이야말로 빠르고 쓸모 있어야 하는 시대에 걷기가 벌이는 조용한 저항

『걷기 예찬』은 목직한 이론서가 아니다. 평생 몸을 연구해 온 인류학자가 쓴, 그 자체로 한 편의 긴 산책 같은 책이다. 그는 책 속에서 하이쿠 시인 바쇼와 소설가 스티븐 스턴처럼 걷기로 이름난 옛사람들을 불러내 독자와 함께 나란히 걷게 한다. 저녁 무렵 길가의 선술집에 둘러앉아 피로와 포도주에 허가 풀린 도보 여행자들이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 같은 책. 그 느슨한 페이지 사이로 단단한 문장

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방심한 독자의 심장을 두드린다.

르 브르통은 걷기를 애써 변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걷기는 애초에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무용한 일이라고 단언한다. 모든 본질적인 것이 그러하듯이. 그는 걷기란 무더진 감각을 버려 세상과 나 사이의 관계를 되찾아 주는 일이라고 친절하게 일러준다. 그러니 무용함이야말로 모든 것이 빨라야 하고 쓸모 있어야 하는 시대에 걷기가 벌이는 조용한 저항이다. 그 저항이라면 나도 평생 가담해 온 셈이다. 나는 다시 짐을 꾸린다. 두 발로만 달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박 로드리고 세희 촬영감독
영화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
맹렬하게 여행하고 틈틈이 글을 쓴다.
filmrodrigo@naver.com



냉면, 차갑고 뜨거운

어릴 적 여름이면 동네에 붉은 깃발이 걸렸다. 흰 글씨로 '냉면'이라 써놓은 천 조각이었다. 냉면집 아무 데나 들어가면 새콤한 국물에 토마토 한 쪽, 오이채, 얼음 덩어리가 얹혀 나왔다. 면은 미리 뽑아둔 걸 삶는 집이 많았는데, 직접 뽑는 집들은 '기계냉면'이라는 간판을 굳이 붙였다. 이상했다. 칼국수는 손칼국수를 자랑하는데 냉면은 왜 기계냉면을 자랑할까. 나중에 알았다. 메밀은 반죽을 단단히 해서 압출식 기계로 눌러야 면발이 나온다. 손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기계로 제대로 눌러 뽑는 집이라는 뜻이었다. 요즘 인기 있는 냉면 노포들이 바로 기계냉면집인 셈이다.

이른바 '평냉', 즉 평양냉면만 인기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함흥식이 더 흔했다. 새콤달콤한 비빔냉면 말이다. 서울 중구 오장동, 종로 예지동 시계골목에 가면 함흥식 냉면집이 여럿 있었다. 사십여 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생존한 실향민이 아주 많았다. 함경도 사투리를 들으며 냉면을 먹었다. 어머니는 냉면이 나오기 전 늘 한 문장을 준비했다. "자르지 마세요." 홀 직원들이 냉면을 가져오면 가위부터 대고 자를 건지 물어보는 게 습관이었기 때문이다.

냉면은 원래 이렇게 정색하고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 백석의 시 <국수>에서 냉면은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으로 그려진다. 희끄무레한 색이다. 지금 흔히 보는 짙은 갈색 면과는 결이 다르다. 냉면은 원래 집집마다 식당마다 배합이 달랐다. 메밀을 100% 쓰는 집도 있고 메밀에 밀가루나 전분을 약간 섞는 집도 있었다. 어느 하나를 정통이라 못 박기 어려운 음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냉면을 둘러싼 강령 같은 것이 생겼다. 식초와 겨자는 치지 않는 게 세련된 태도이고, 메밀 함량이 높아야 향기롭고, 가위를 대지 않는 게 정통이라는 식이다. 취향이 규범이 돼버린 셈이다.

이런 흐름과 별개로 최근 몇 년간 냉면을 둘러싼 진짜 뜨거운 화두는 맛도 정통성도 아니고 가격이다. 서울 유명 냉면집의 냉면 한 그릇 값은 이미 1만5천 원을 넘어 2만 원에 근접하는 곳도 나왔다. 여기에 사리나 만두를 더하면 2만 원을 훌쩍 넘긴다. 서울 냉면 평균가는 몇 년 새 20% 가까이 뛰었다. 짜장면이나 칼국수보다 유독 가파른 상승세다.

이 가격을 두고 두 갈래 설명이 맞선다. 한쪽은 원가론이다. 메밀은 밀가루나 전분보다 훨씬 비싸다. 육수 하나 내는 데도 고기 선별, 핏물 제거, 장시간 끓이기, 기름 걷어내기 같은 손 많이 가는 공정이 들어간다. 면을 직접 뽑는 집이라면 제분, 반죽, 숙성까지 사람 손을 거친다. 이런 공을 생각하면 지금 가격도 과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른 쪽은 반발한다. 냉면이 아닌 음식이라고 해서 공이 덜 들어가는 게 어디 있느냐, 메밀값이 비싸다는데 한 그릇에 2만 원 가까이 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또 비싸지 않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드는 함흥식은 왜 그리 비싸냐고 묻는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줄을 서서라도 먹겠다는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린다는 분석도 있다. 인터넷과 SNS가 낳은 거품이라고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원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고 애초에 식당마다 재료비가 각기 다르니 원가분석을 하기도 어렵다. 결국 어느 쪽 주장도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매년 여름철이 되면 같은 논쟁만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몇 해 전에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냉면 적정가를 두고 소동이 인 적도 있다. 어떤 이는 7~8천 원이 적절하다고 했고, 냉면집 쪽에서는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유명 냉면집들이 대개 도심 요지에 자리 잡고 있으니, 재룻값보다 자릿값이 가격에 더 크게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원조 논쟁, 노포 프리미엄, 대기줄 마케팅 같은 요소까지 겹치면서 한 그릇의 가격이 순수하게 원가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느 쪽 말을 들어도 일리가 있고, 어느 쪽 말도 완결된 답은 아니다.

음식 하나를 두고 이토록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맘 편하게 인스턴트 냉면 한 봉지 끓여 먹고 말겠다"는 사람도 많다. 냉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음식이 아닐 수 없다.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몇 년 배웠다. 지금은 칼럼을 쓰고, 밥을 먹으러 전국을 다닌다.
chanilpark@naver.com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 기획전시

개항, 부산항 150년

THE OPENING of THE PORT:
150 YEARS of BUSAN PORT

2026.6.30.TUE - 9.27.SUN
기획전시실1

10번의 공(功)과

한 번의 과(過)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지 않는 것이 낫다(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18세기 영국의 판사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이 한 말이다.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놓친다면 사회에 실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모든 국가에서 블랙스톤 판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죄인을 놓치는 것보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소비자의 신뢰를 조금만 잃어도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듯이 인간은 과도한 공포심에 의해 패닉에 빠지곤 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10명 중 한 명은 억울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범죄자로 오인받을 행동은 조금도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내지도 않은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우려해 운전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고, 정당하게 상품을 판매하다가 사기꾼으로 몰릴 가능성이 우려돼 상업 분야에 종사하기를 꺼릴 것이다. 결국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릴 조그만 가능성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 모든 국가에서 블랙스톤 판사의 원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블랙스톤 판사가 우려하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 사회 전체가 잘못된 사람을 철저하게 잡아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조에 동의하는 듯하다. 민사에서 배상금이라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어떤 경제활동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대해 보상하는 것까지는 감수할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간다고 하면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물론, 뚜렷한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이런 보도가

열 번 있다면 아홉 번은 사실일 수 있지만 한 번의 보도로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블랙스톤 판사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잘못된 보도나 게시물에 반론을 표명하더라도 한번 퍼진 거짓된 정보는 기정사실이 되기 쉽다. 아무리 정당한 경제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이나 SNS에 악의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당사자로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고, 이는 또다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각종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만민에게 공개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린 작은 의견이 10년 후에 엉뚱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사방에 존재하는 동영상 장비들에 의해 모든 행동이 노출돼 하나하나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벌이 주어져야 하지만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져야 한다. 경제활동을 많이 하면 훌륭한 업적을 이룰 기회가 많아지지만 동시에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10번의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해도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전의 업적은 모두 사라지고 그 한 번의 잘못만으로 큰 처벌을 받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은 대단하지 않은데 벌은 치명적인 상황이다.

물론 잘못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다. 하지만 처벌만 중시한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인재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미래의 한국경제에 매우 어두운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균형이 필요하다. ㉞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낱말퍼즐

시사·경제 용어를 낱말 풀이 형식으로 익혀 보세요.

이달의 『나라경제』를 열심히 읽은 독자라면 쉽고 재미있게 풀 수 있을 문제들입니다.

	①					②	③ 전	
④		프		젝	트			
							화	
	르		⑤					
⑥		⑦		형				
			력			⑧		⑨
통		샷						
			⑩ 스		⑪	크		러
⑫		항						

가로퍼즐

- ②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매우 커다란 변화.
- ④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정부가 국가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한 초대형 국책사업. '3대 000000'
- ⑦ 호황 업종과 소의 업종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성장 구조를 알파벳 모양에 빗댄 말. 최근 반도체 호황이 일부에만 쏠리면서 '000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 ⑧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발로 디딜 수 있게 만든 도구. 정부는 청년과 기업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성장 000'을 구축하고 있다.
- ⑩ 격식 없이 가볍게 주고받는 잡담이나 담소를 뜻하는 영어 표현.
- ⑫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 환적 세계 2위인 우리나라 최대 항만. 1876년 개항 이후 150주년을 맞았다.

세로퍼즐

- ①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 유럽-아시아 항로의 중심 기항지로 떠오른 도시국가.
- ③ 자동차나 선박, 산업기계의 동력원을 석유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 ⑤ 우라늄의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
- ⑥ 우리나라의 무역·통상 진흥,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 ⑦ AI 기술을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결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대한민국의 범부처 프로젝트.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을 뜻하는 단어에서 이름을 따왔다.
- ⑨ 좁게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하고 넓게는 특정 분야의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 ⑪ 생성형 AI의 거대언어모델이 문장을 처리하는 최소 단위. AI 데이터센터를 이것을 만드는 공장에 빗대 '00 팩토리'라 부르기도 한다.

· 8월 21일까지 kdi_nara@naver.com 혹은 『나라경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DM으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해
커피쿠폰(1만 원 상당)을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8월 28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nara_kdi

② blog.naver.com/kdi_nara

**“If a man knows not
to which port he sails,
no wind is favorable.”**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Lucius Annaeus Seneca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잡기 어렵습니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뜻은 펼쳐졌습니다.
그 여정을 따라 올해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